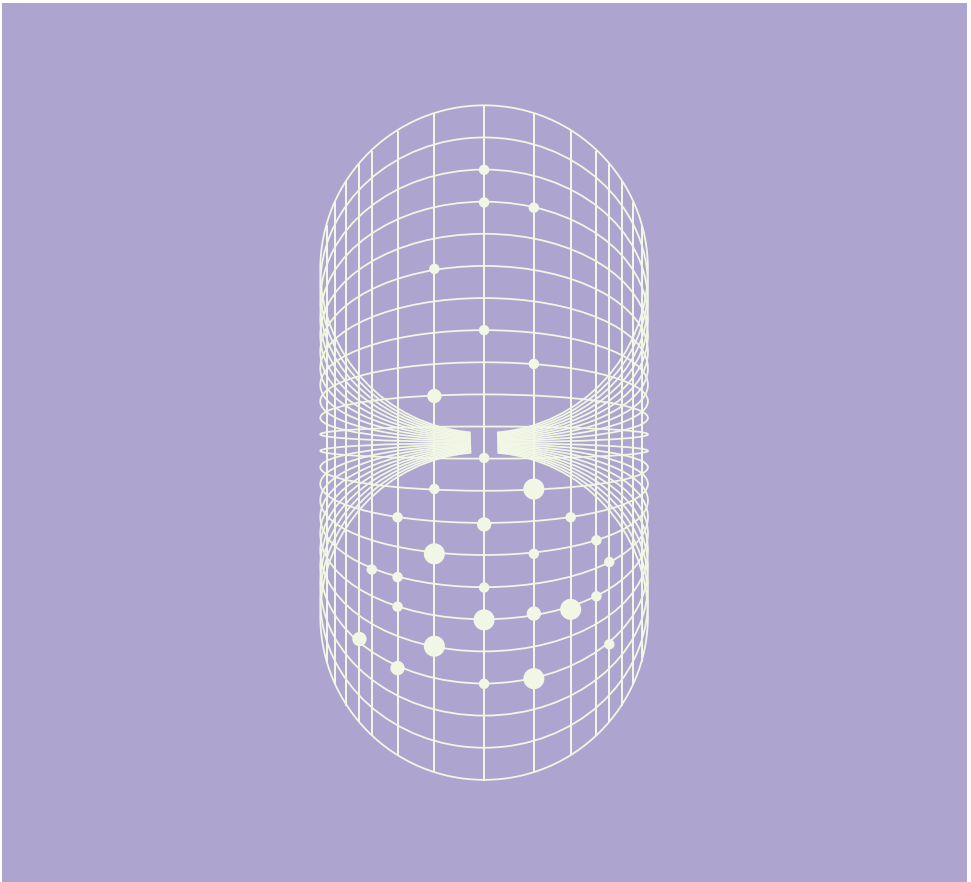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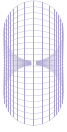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_정은아, 하바라





_여성들의 정의로운 전환

정은아 _ ejung150@gmail.com

제일 자신 있는 일은 빈둥거리기, 좋아하는 일은 놀러다니기, 장래희망은 아마추어 운동선수와 배우, 작가입니다. 여성평화·통일운동을 하다가 기후위기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고 싶어 정의로운전환을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귀어, 페미니즘, 평화, 기후정의를 엮어내고자 여기저기 기웃대고 이것저것 배우고 이사람저사람 만나고 다닙니다. 기후위기와 여성의 삶을 꿰어 멋진 연구결과물을 내고싶었으나 좌충우돌 연구기록담에 가깝게 되었네요. 그래도 동료와 활력향연 덕에 첫 발을 떼었으니 다음 목적지로 또 대책없이 가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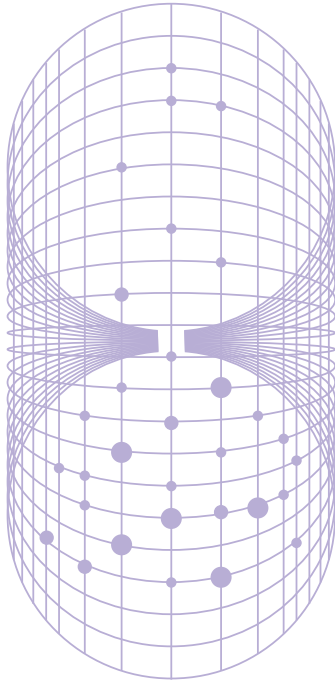
하바라 _ vara0327@hanmail.net

120살 무병장수 시대에 기후변화로 일찍 죽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기후변화도 막고, 사회문제도 해결할겁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국제환경학과 환경정책을 공부하고, 지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를 착취하고 그 착취를 정당화하는 사회에서 인간과 인간의 서식지는 함께 죽어갑니다. 가장 오랜기간, 체계적으로 착취당한 여성의 삶은 기후변화로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연구가 가장 오래되고 깊숙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를 잇는 작은 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활동가 연구지원사업 결과물로서 서울시NPO 지원센터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중되는 기후위기,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쪽방촌여성

정은아 하바라



서울시NPO지원센터 활력향연

목차

I	서론	04
II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	
	1. 연구목표와 범위 접근방식	06
	2. 사전 인터뷰	08
	3. 자문회의	10
	4. 집담회	12
III	문헌연구	
	1. 기후위기 이해	19
	2. 기후정의와 젠더정의의 연계	27
	3. 기후위기와 재난의 성차별적 영향	32
	4. 재난의 성차별적 영향을 다시 검토하기	37
	1) 쪽방촌 여성 주민	37
	2) 장애여성	38
	3) 청소년 성소수자	40
IV	사례 연구	
	1. 이주여성농업노동자	42
	1) 고용허가제와 종속된 노동	44
	2) 폭염, 흑한, 호우와 이주여성농업노동자	48
	3) 논밭 옆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기숙사	51
	4) 코로나19, 고립과 지원체계 미비	54
	5) 이주노동자, 스스로를 구하다	57

2. 동자동 쪽방촌 여성 주민	58
1) 쪽방은 여성에게 공포와 고립의 공간	61
2) 최소한의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비싼 집	63
3) 공공주택사업 문제, 이사 문제	66
4)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쪽방촌	67
5)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는 여성들	68
3. 비교 분석과 시사점	69

V 결론	78
-------------------	----

에필로그	82
참고문헌	84
부록	88

I. 서론

기후위기는 장기적으로는 가뭄과 기온 상승, 해류 변화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폭염, 수해, 가뭄, 한파, 감염병 같은 재난 형태로 다가온다(UN Women Watch, 2009).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재난은 이미 현실이 됐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영향은 각자가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연령, 장애 여부, 빈곤, 교육 수준 같은 요소는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접할 수 있는 정보를 한정한다. 어떤 사회, 지역, 국가에 살고 있는지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위기 규모와 종류, 시기, 사회 대응시스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이지만, 개인이 받는 여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기후위기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기후위기의 불균형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성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후위기의 성차별적 영향과 관련한 자료나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데이터와 연구 성과 부족은 현실에 대한 몰이해와 몰성적 적응 정책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저감 정책이 실제로 여성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여기서 여성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각 사람의 정체성은 모두 같지 않다. 저마다 겪고, 감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후위기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구성했다. 먼저 해외 사례에 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의 성별화된 영향을 살폈다. '기후위기가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만약 여성이 더 많은 피해 혹은 남성과 다른 종류의 피해를 받는다면 그 피해는 어떤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차별이 교차되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사례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은 스물세 명의 당사자, 활동가, 연구자를 만났다. 폭염과 수해, 한파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그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를 살피고, 이들이 어떻게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왜 이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폭염, 수해, 한파, 코로나19라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 상황을 젠더 관점에서 관찰하고, 특히 이주여성농업노동자나 홈리스, 쪽방촌 주민들이 기후위기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밝혀 내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탐색적 성격을 지닌 기초 연구이다. 이 연구의 문제 제기와 결론이 기후위기가 성차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와 실태 조사, 정책 대안 마련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연구팀은 누구나 이 글을 읽고 이해하길 위해 쉽게 쓰려고 했다. 전문 용어는 되도록 피했다. 꼭 필요할 때는 본문에서 설명하거나 각주를 사용했다.

II. 연구 설계와 연구 방법

1. 연구 목표와 범위, 접근 방식

연구팀은 기존 문헌과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초기 연구 대상을 설정했다. 2018년 기록적인 폭염 이래 건설노동자 등 야외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2020년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는 감염병이 이미 주변화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들을 어떻게 더 배제시키고 고립시키는지를 드러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과 삶의 조건은 폭염, 한파, 수해 등과 만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한편 '안전하게 집에 머물라'는 정부 코로나19 대책은 역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 살지 않는다는 문제 역시 드러냈다. 2020년 말 영하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속행 씨 사건 이후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문제와 노동조건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주거 문제는 주거 빈곤뿐만 아니라 에너지 빈곤과도 연계된다. 폭염, 한파와 같이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빈번해지고 심해질수록 냉난방을 위한 필수 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에너지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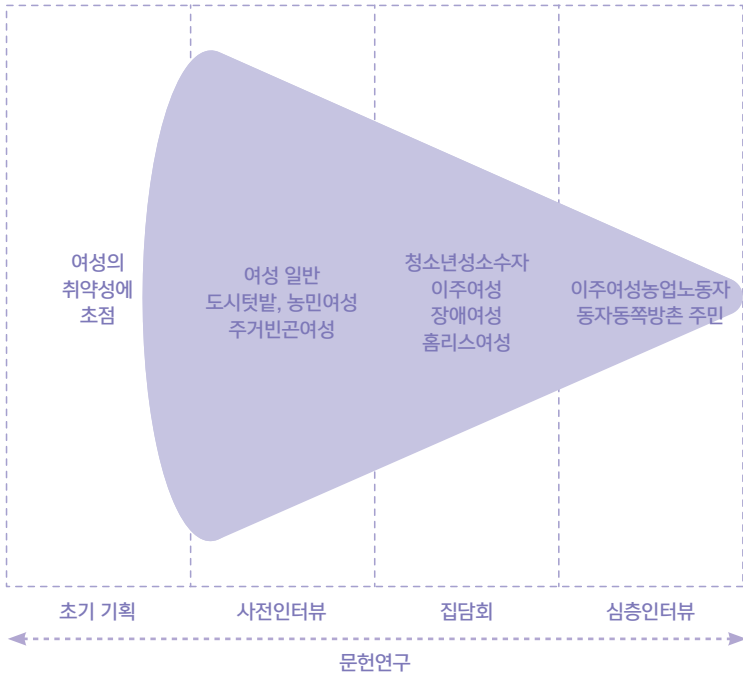
따라서 이 연구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주거환경과 빈곤, 언어, 인종, 국적 등의 조건이 성별과 맞물려 어떻게 기후위기와 이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문제를 증폭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젠더 관점이란 생물학적 성별과 기계적 평등을 따지는 일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층층적 정체성을 고려하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

인 불평등을 분석하는 교차성 패러다임의 관점이기 때문이다(콜린스, 2009. 배은경, 2016에서 재인용).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농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을 선정했다. 이후 문헌연구, 사전 인터뷰와 집담회를 거쳐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 동자동쪽방촌 주민이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피고자 했다.

[그림 1] 연구 단계별 대상과 범위 구체화 과정



2. 사전인터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김미영(가명) 전 녹색당 혁신위원장을 만나 연구팀이 조사하고자 하는 분야의 활동가를 소개받고,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 김미영 활동가는 여성은 늘 사회적 한계에 부딪히며 상황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제약받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그와 같은 피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특히 자녀를 둔 여성이 사회적 성역할과 돌봄노동을 과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이 결국 여성을 전통적인 역할로 회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 밖에 태풍이나 수해, 폭염과 관련해서는 여성 노인 비율이 높고, 월경 등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각종 기후 재난으로 가장 취약해지거나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으로 농민 여성과 쪽방촌 여성, 야외노동자 여성이나 청소노동자 여성을 지목하면서 관련 활동가들을 소개했다.

김미영 님의 소개로 만난 박예나(가명) 님은 반빈곤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분으로 2020년 빈곤가구 심층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복지 현황을 연구했다. 장애가 있어 옥탑방에서 작년 일 년 내내 거의 갇혀서 지낸 할머니의 사례, 반지하에 살면서 매일매일 제습기와 냉장고를 두 대씩 돌리는 할머니의 사례, 코로나19로 학교가 문을 닫아 판잣집에서 엄마가 네 아이와 하루 종일 부대끼면서 생활하는 사례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 특히 코로나19로 쉼터, 교회 같은 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심해진 고립 문제와 냉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의 문제를 알려준다.

또 밀집된 주거빈곤지역 거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로 나름의 지역사회를 형성하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가시화·제도화된 쪽방촌에서 도시락, 무료급식, 물품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임대주택 가면 가스비가 100만 원씩 나온다' 하는 낭설이 돌 정도로 정확한 정보 접근이 어렵다는 점, 임차료와 냉난방비를 포함한 주거비와 지출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열악하지만 현재의 거주지에 계속해서 머물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거와 에너지 지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회복지체제가 '열악함과 필요함을 증명'하게 되어 있어 열악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하며, 지원 체계 간 협업 단절이 주거빈곤과 에너지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김미영 님의 소개로 도시텃밭 보급과 토종씨앗 보급 활동을 하시는 최미혜(가명) 님을 만났다. 최미혜 님은 기계화, 단일화, 상품화된 농업이 남성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개량 종자를 파종하고 기계를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팔기 위해 큰 규모로 짓는 농사, 즉 현대식 농업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불러온 기후위기 문제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방식이 아닌 소농, 다양성, 갈무리하고 보존하는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힘이 중요하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실제로 토종 씨앗을 얻으려고 농촌을 다녀보면 대부분 여성 노인이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있다고 했다. 씨앗을 갈무리하고 저장하는 일을 여성이 맡고 있어서 종의 다양성과 먹거리 다양성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열 비아캄파시나 국제조정위원은 여성 농민이 기후위기를 운명으로 느

킨다고 했다(김정열, 2021). 여성 농민이 기후위기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당초에는 최미혜 님에게 소개를 받아 여성 농민을 만나고자 했으나, 연구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향후 여성 농민과 기후위기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자문 회의를 기획했다.

3. 자문회의

자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 인터뷰 수행과 분석 등 기술적 조언, 일반화가능성과 개별성의 고민을 풀고자 했다. 사전 인터뷰와 문헌연구 과정에서 연구팀은 기후위기를 겪은 직접 경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여성, 이주민, 청소년, 농민을 연구 참여자로 잠정 설정했다. 성별과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교차하는 삶 속에서 기후위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과정에서 고민한 부분은 개별 집단 또는 개인의 경험을 여성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개별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화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선정과 인터뷰 시 시사점 도출을 위한 분석 방법에 대한 조언이 필요했다. 따라서 기후재난과 여성의 상관관계를 보건의학적, 사회문화적, 연구 방법론적 접근 방법에서 조연해 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선정하고 섭외했다. 연구팀은 세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연구 방법론과 범위를 찾아갔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이화젠더법학』에 「재난 관련

감염병의 관리와 자연재난의 젠더 영향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을 게재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광영호 교수에게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재난과 성불평등, 연구의 전반적인 방법론 분석틀, 연구 범위와 접근 방식 등을 중심으로 질문했다.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례를 연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김현미 교수는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논문 「코로나 시대의 '젠더 위기'와 생태주의 사회적 재생산의 미래」를 통해 재난의 영향력이 어떻게 기존의 젠더, 계급, 인종적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며 증폭하는지 젠더 관점을 제시했다. 연구에 앞서 김현미 교수에게 기후재난이 여성 및 소수자인 집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 설계와 분석틀에 관해 조언을 듣고자 했다. 김현미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한계로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왜 그들이 취약해지는지를 구조적으로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에 긍정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자 했던 당사자 집단의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연구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만나게 된 고정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과 수차례의 사전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거쳐 정리한 연구 방법론과 연구 범위에 대해 최종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고정근 부소장은 기후위기와 맞물린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 목소리를 내며 활동하고 있다. 본격적인 인터뷰와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고정근 부소장을 만나면서 그동안 조사했던 선행 연구 검토와 시사점,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등 기존에 고민하던 부분에 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소수 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례 연구를 위해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관련 분야 활동가를 대상으로 집담회를 거치기로 했다.

4. 집담회

전문회의와 연구팀 내부 회의를 거치면서 연구의 시간적, 비용적, 사회적(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한계를 고려해 조사 대상을 10명 내외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초적인 예비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집단보다는 두 집단만 선정하여 심층 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다. 심층 조사 대상 선정에 앞서 기후위기를 전면에서 맞이하고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공동체에서 상담과 지원, 애드보커시 연구 분야의 활동가와 당사자를 섭외한 뒤 초청하여 집담회를 진행했다.⁰¹⁾ 집담회 참석자는 홈리스 행동 활동가와 홈리스 당사자이자 활동가인 약학 학생 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청소년

01) 당초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페미니스트, 장애여성, 홈리스 여성, 이주여성단체 활동가를 섭외하려고 했으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 등의 문제로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2] 집담회 (2021년 6월 8일, 서울시NPO지원센터)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땡동 활동가였다.

연구팀은 참석자들이 활동가로서, 중간지원자로서, 대변인으로서, 당사자로서 현장을 지원하고 연구,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접한 재난과 기후위기 관련 경험을 알아보고자 했다. 참석자를 통해 활동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차별 경험이나 어려움, 그 원인을 물었다. 그와 함께 이들이 기후위기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집단적 시도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좌절했는지, 만약 좌절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섭의를 위해 활동가들에게 연구 취지와 목표를 설명하고 기획안을 공유한 후, 집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코로나 19, 폭염, 수해를 예로 들어서 기후 재난이 미친 영향을 물었을 때, 참여자들은

02) 집담회에서 공유한 자세한 폭염과 수해보다 코로나19에 관한 경험을 더 많이 나눠주었다.⁰²⁾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라.

코로나19는 장기적인 팬데믹 상황인데다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어, 그 영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반면에 폭염과 태풍, 호우는 비교적 재난 상황이 짧고 지역에 따라 피해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눈에 띄는 영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자들이 대변하는 홈리스, 장애여성, 이주여성은 국가 방역 정책과 지원체계 속에서 배제되고 비가시화되면서 일상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심해진 차별과 혐오를 겪으면서 생사의 문제로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위기지원센터 땡동은 2020년 코로나19 긴급생계비지원 사업을 통

해 청소년성소수자를 긴급 지원하고, 2021년 6월 일 년간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 탈가정 고민과 경험에 관한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땡땡 활동가는 그 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지 설명했다.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코로나19가 어떻게 기존에 장애여성이 겪고 있는 차별을 심화, 가중시키고 있는지 장애를 이유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 전파 매개인 듯 멀리하거나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의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를 통해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시설화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문제였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냈다. 코호트격리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 노인 등의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했다. 청도대 남병원사례는 잘못된 코호트 격리가 어떻게 감염 위험을 높이는지, 시설화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사례다.

유사한 지적이 홈리스행동 활동가와 당사자에게서도 나왔다. 식사는 생존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많은 민간급식소가 문을 닫자, 몇 남지 않은 급식소에 이용자가 몰리게 되었다. 서울시위탁급식소는 해결책으로 '노숙인증(전자확인증)'을 통한 이용자 선별을 내놓았다(서울특별시, 2020:123-126). 그러나 전자확인증 발급은 얼굴과 이름이 고스란히 드러나 신분노출의 우려가 있어, 모두가 발급받는 것은 어려웠다.

서울역에 있는 홈리스여성 응급 잠자리도 코로나19로 사라졌다. 구체적인

사례나 면밀한 통계는 없지만, 밖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예상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 등 공공쉼터 이용이 중단되고, 상담 소나 센터도 문을 닫으면서 여성들은 특히 폭염이나 월경 중에도 샤워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결혼이주여성, 이주 여성노동자, 난민, 과체류이주민, 미등록이주민과 무국적 아동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포착되지 않는 존재들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홈리스, 장애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주여성의 경우도 방역 정책과 지원 체계가 이들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 운영되면서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상황을 겪고 있었다.

한편 2020년 수해는 기후 영향을 직접 받는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에게 특히 문제를 남겼다. 자신의 집을 챙기기도 전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 복구를 무급으로 먼저 해야 하고, 기숙사가 피해를 받아 대피소에 늦게까지 머무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야외노동, 농업, 지역과 이주노동자라는 특성 때문에 폭염과 수해의 영향을 직접 몸으로 겪은 것이다.

코로나19, 폭염, 수해 등 재난상황에서 청소년성소수자, 장애여성, 홈리스, 이주여성이 겪고 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아래 [표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거, 의료, 노동·경제, 차별·혐오, 방역·지원체계, 폭력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발생하는 문제를 정리했다.

[표 1] 코로나19와 재난 상황에서 경험하는 문제

	이주 여성	홀리스	장애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주거	·외출금지 ·시설 과밀화 ·집단감염 ·자가격리 어려움	·강제퇴거 ·밀집주택에코호트격리 ·시설내 집단감염 ·자가격리 어려움	·시설장애인 일상통제강화 ·비일관적 시설 통제 ·집단감염 ·자가격리 어려움	·주거권 보장 어려움
의료	·의료공백발생	·의료공백발생	·의료공백발생	·건강관리, 자기돌봄 어려움
노동·경제	·서비스업종, 아르바이트 해고로 경제적어려움발생 ·농어업노동자 폭염, 수해 피해	·일자리 감소 (한국일보, 2020)	·출입통제로 시설장애인 출근 어려움 ·편견으로 경제활동 곤란 ·구직포기장애인 증가 (매일노동뉴스, 2020) ·유자녀 장애여성/여성 돌봄노동 증가	·쉽게 해고됨 ·생활 어려움, 돌봄노동 증가
차별·혐오	·특정 국적 이주민 차별과 혐오	·노골적 혐오 (참여연대, 2020)	·장애유형별 당사자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환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부족 (비마이너, 2020)	·혐오 심해짐, 고립, 외로움
방역·지원 체계	·방역,지원체에서배제 ·이혼,별거,쉼터 거주 여성에게 재난지원금 수령 어려움 ·정보접근성 제약	·재난지원금수령어려움 ·급식소, 쉼터 등 중단 ·정보접근성 제약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등, 좁은 주거환경 대안 부재 ·복지관 등 중단, 사회활동 축소 ·물품지급 부족	·지원금, 지원 정책에서 배제
폭력	·쉼터 입소 위한 코로나19 검사, 대기기간속소 자체 해결 ·가정폭력 위험 증가	·거리로 내몰려 폭력 위험 증가	·친밀한 관계 폭력 위험 증가 ·폭력신고 어려워 신속 대처 어려울 수 있음	·원가정 내 폭력 위험증가 대처 어려울 수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이 생겨난 문제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더 심화되고, 분화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로나19, 폭염, 수해를 비롯한 기후재난은 열악한 주거와 시설 위주의 주거지원, 부족한 의료 지원과 정보접근성, 일자리와 노동차별·빈곤, 차별과 혐오, 폭력 등 기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활동가들은 공통적으로 선별복지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확하게 지원대상과 비지원대상을 선별하려고 할수록 나이, 시민권, 주거환경, 소득여부, 부양가족 등을 따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시혜적 관점에서 지원을 받을 만한 사람을 걸러내는 일이다. 밀집폭방에 산다고 급식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은 기만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영주권자를 제외한 이주민은 왜 지자체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가.

당사자와 지원 단체에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도는 차별적이고 구멍이 송송 뚫려있다. '지원대상'을 골라내려고 할수록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는 존재들은 배제된다. 재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은 재난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이들을 포괄해야 하고, 이들에게 신속하고 먼저 다가가야 함에도, 오히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수자는 지원체계의 틀 밖으로 밀려나 있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기존 사회구조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불평등과 차별을 확대 재생산한다.

집담회를 통해 심해지는 기후위기가 인간답고 안전한 주거와 큰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주여성농업노동자는 이주민이라는 특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야외노동이라는 특성이 겹치면서 기후위기로 큰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례연구에서 주거권 문제를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홈리스, 그중에서도 밀집주택인 동자동쪽방촌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경험과 영향을 조사하기로 하고,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례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자연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기후정의와 젠더정의의 연계, 기후위기와 재난의 성차별 영향과 관련한 기존 연구와 사례를 알아본다.

Ⅲ. 문헌연구

1. 기후위기 이해

어느 순간부터 언론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 이상 기후, 빙하의 손실, 해수면 상승, 생태계 파괴 관련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전국적인 산불로 동물 30억 마리가 사망했고,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발생한 물부족 현상으로 전쟁이 발생하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해 인류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오는 극단적인 재난과 피해 외에도 기후위기는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더욱 더워지는 한여름 무더위는 야외활동에서 일사병을 유발하고, 기록적인 장마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습도를 높여 곰팡이나 곰팡이독소, 각종 유해균을 발생시켜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 관련 생태계가 변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온다.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거나 노동 유지와 건강 문제에서 더욱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된다. 이렇듯 기후변화가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주변 환경의 문제이며 건강의 문제이다.

과학자들은 1970년도부터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언급해 왔으나 국제사회에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해 왔으며, 이런 국제적인 태도가 기후변화를 가속시켜 이제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십 년간 무시되어 오던 기후변화 문제가 빈번한 기후재난으로 이어지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정책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1970년 환경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 1990년대에는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출범했고, 1997년 제3차 IPCC 당사국총회에서는 최초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 각국 정부의 노력은 부진했고, 세계적 공통의 합의도 이뤄지 못했다. 드디어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선진국과 저개발국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국가가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되,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제한 하자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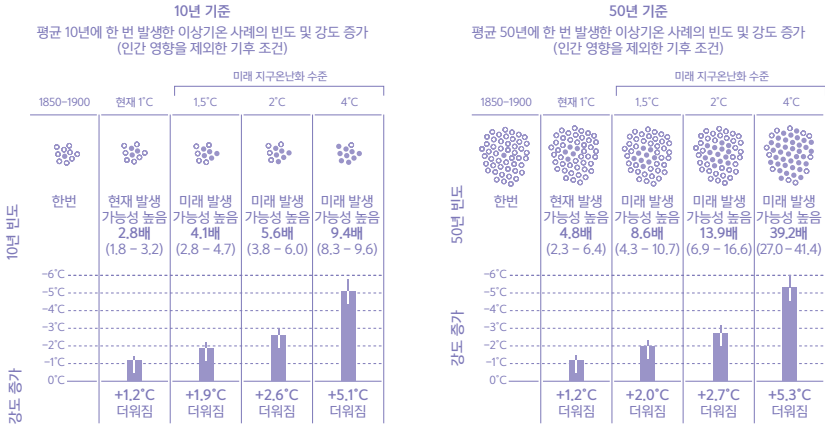
IPCC는 1990년부터 5~7년 간격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발간해 왔다. 제1차 보고서부터 주요 내용은 '지구온난화 제시',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따른 것',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감축 필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으로 발전해 왔다. 제6차 평가주기에는 3개의 특별보고서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방법론 보고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6차 평가보고서는 2022년 11월 각 실무그룹의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영향·적응·취약성이 담긴 종합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2018년 파리협정에 따라 작성된 'IPCC 1.5도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에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제시하고 평가

하였다. 특별보고서에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이산화탄소(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흡수가 완전히 상쇄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2도 상승에 비해 기후변화 영향이 미치는 생태계와 환경, 경제적 피해 리스크가 확연히 줄어들며, 특히 2050년에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수억 명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1.5도 달성 노력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제1 실무그룹에서 IPCC 6차 평가 보고서(Sixth Assessment Report: 2021)를 발표했는데 인간이 대기, 해양, 토지의 온난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백'하며, 최근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는 근현대 인류사에서 전례 없는 일임을 밝혔다. 또한 지구온도가 1.5도 상승 시에도 전례 없는 극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더라도 이런 현상을 멈출 수 없다는 무서운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그렇다 해도 탄소중립과 1.5도 목표를 달성하면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視像) 현상, 생존 조건 악화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림 3]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폭염 수



*출처: IPCC 6차 평가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0년부터 매년 범부처 연합으로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은 연평균기온이 13.2도로 평년(12.5도)보다 높았고, 1973년 이후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연평균 누적 강수량은 여섯 번째로 많았던 해였다고 설명한다. 언론과 각종 보도에서 나타난 2020년의 이상기후 관련 기록은 ‘기상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1월’, ‘최장기간 장마와 많은 비’, ‘평년과 다른 태풍 발생 시기’ 등이었다.

또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IPCC 6차 평가보고서의 최신 온실가스 경로에 따라 산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 2종(SSP1-2.6, SSP5-8.5)⁰³⁾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을 분석한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0)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산업발전 중심의 고탄소 시나리오, SSP5-8.5)대로라면 변화 적응대책 수행 여부 등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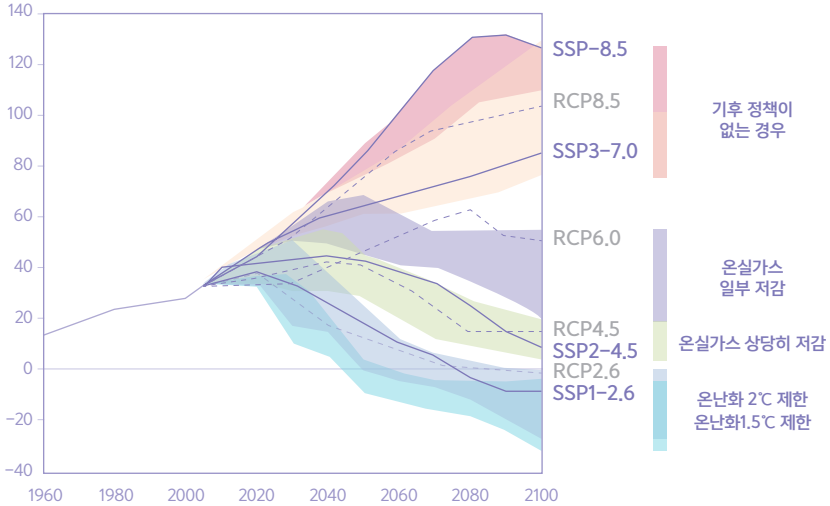
라 미래 사회 경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뒤의 숫자(2.6, 8.5)는 온실가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구흡수에너지양인 복사강제력을 뜻한다.

2100년까지 현재 대비 2.7도에서 7.3도까지 연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평균 강수량은 6~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에 따라 미래 중반기(2041~2060년)부터 극한기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도 동아시아 시나리오처럼 현재 대비 미래 후반기(2081~2100년)까지 연평균기온이 2.6~7.0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3~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극한기후지수도 마찬가지로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즉,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한 고속성장 경로(고탄소 시나리오, SSP5-8.5)대로라면 극한기후는 심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 기후변화 시나리오





*출처: 국립기상과학원(2020),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오성남(2018)에 따르면 1950년 이래 수집된 관측 결과는 일부 극한 기후변화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은 최근 10여 년간 부단히 증가해 왔다. 특히 홍수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극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변화하는 기후는 극한 기상 및 기후 현상의 빈도, 강도, 공간 범위, 지속기간, 시기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전례 없는 극한 기상 및 기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IPCC 4차 보고서와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EM-DAT)에서는 1975년부터 2008년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재해 발생 건수는 약 4.5배 증가하고, 재해 규모는 약 10배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유엔재난위험감사무국(UNDRR)의 「재난의 인적 비용: 지난 20년(2000~2019년)의 개요(2020)」 보고서에서 그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그 중 90.9%가 기후와 관련한 재난이었다고 밝혔다. 홍수가 3,25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태풍이 2,04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세기 말

(1980~999년)에 발생한 4,212건의 재난의 1.7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실제 2020년은 기후위기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가 어느 때보다 심했다. 2020년 1월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도양 양극화 현상으로 호주에선 수개월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발생해 동물 약 30억 마리가 죽었고, 할리우드 부촌이 위치한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산불도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그리고 2021년에도 기후위기가 계속되어 전례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869명으로 2020년에 비해 2.4배 증가했고, 북미 지역에서는 1913년 이후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700명 이상이 돌연사했다.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역대급 홍수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경고성 사건이 전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년째 인류의 문화를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도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를 궁극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기후재난에 따른 공포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폭염, 호우, 전염병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를 대비하고 적응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체로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가 뚜렷하고, 농촌지역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범인 도시보다 재난 복구나 예측 인프라가 적어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도시 또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해와 전염병 피해에서 안전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수록 밀집된 인구로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도 시군구 기준으로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산림원, 2018). 도시 열섬 현상은 도시 기온의 상승이 지구온난화, 폭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도시의 평균온도가 전국 평균온도보다 크게 상승하고, 전례 없이 강한 폭염과 가뭄,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senzweig et al., 2008). 한국과학기술산림원(2018)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고 건물이 높기 때문에 메가급 홍수, 가뭄, 강풍, 폭염 등 위험 기상에 매우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최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열돔과 열파 현상에 따라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마이뉴스(2020)에 실린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조사에 따르면 2006~2017년 통계청에 등록된 전국 14세 이상 사망자 약 313만 명을 대상으로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그중 약 1,440 명이 폭염(열파, heat wave) 등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호우, 태풍, 대설로 발생하는 사망자보다 32.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체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들에게 비교적 많이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기후부정의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후위기는 엄청난 생태 변화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한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되며 지구상 생명체의 68%가 줄어들어 대멸종 시대가 온다고 경고하는 과학자도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북반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적 책임이 적은 남반구의 저개발국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 게다가 기후재난 대응 역량이나 피해 복구 역량은 기존의 사회, 경제, 문화적 불평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기후위기는 기존의 사회불평등과 부정의와 맞물려 이를 강화, 증폭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 피해와 영향은 차별적이며 불평등하게 미친다.

04) 해당 부분과 다음 3절은 정은아(2021)가 돌봄민주주의캠프에서 발표한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한 상상'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기후정의와 젠더정의의 연계⁰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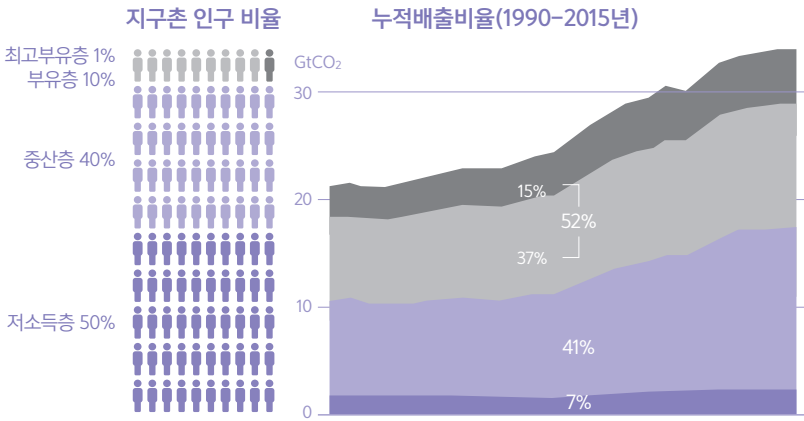
'기후정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남반구와 북반구 사이의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위기 영향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등장했다(carbonbrief, 2021). 대체로 남반구, 저지대와 아열대 지역, 여성, 노인, 아동, 흑인, 선주민,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 책임은 적지만 영향은 더 많이 받는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책이 이러한 불평등 해소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으면 기후위기는 기존의 불평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이정필·박진희, 2010; 한재각, 2020; 홍덕화, 2020).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IPCC, 2018).

기후정의와 환경정의

기후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선 환경정의의 이해가 필요하다. 앞서 소개했듯 1970년대 환경운동이 확대되면서 현재의 환경보호나 규제 정책의 맥락에서 인종, 민족, 경제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정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미국 EPA보고서, 환경정의).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뜻하는 절차적 정의와 자원배분 규범을 뜻하는 배분적 정의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되는 사람 없이 온실가스 배출이나 자원의 분배, 사용에도 평등해야 한다.

[그림 5]은 전 세계 인구를 소득 기준에 따라 나누어 소득수준별 1990년에 서 2015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인구비율이 단 1%에 불과한 가장 부유한 이들이 15%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동안, 하위 50%에 해당하는 이들은 고작 7%를 배출했다.

[그림 5] 전 세계 소득 기준에 따른 1990~2015년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 비율



Per capita income threshold ISPPP2011 of richest 1%: \$109k; richest 10%: \$38k; middle 40%: \$6k; and bottom 50%: less than \$6k.
 Global carbon budget from 1990 for 33% risk of exceeding 1.5C: 1.205Gt

*출처: Oxfarm 2020 Confronting carbon inequality, p. 3.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이들은 부자가 아니라 빈곤한 이들도다. 절대빈곤선 아래 생활하는 인구 중 70%가 방글라데시, 중국, 콩고공화국, 인도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는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을 심하게 받는 국가이기도 하다(FAO, 2016).

기후정의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기후위기의 성차별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정필·박진희(2010)는 이미 10년 전에 기후위기가 결코 성중립적이지 않으며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여성이 기후위기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현실이 여성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여성을 취약한 위치에 놓는 자본주의-가부장제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인권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를 분석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권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효제(2020) 역시 기후위기가 성차별을 강화하고 젠더 폭력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하면서 성평등 달성이 기후정의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에서 인권과 성평등을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도의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문제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는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중에서 기후재난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그에 따른 재난도 더욱더 빈번하고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재난 상황은 사회를 바꾸고, 만연했던 불평등을 더욱 부각할 것이다. 특히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한 성차별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성을 더욱 취약하고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과 성차별 해소, 성평등 정책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6] 기후정의와 젠더정의를 외치는 시위대



*출처: .mladiInfo.

남태평양의 피지공화국은 인권기반의 기후위기 접근과 성평등을 기후 위기 정책에 통합한 국가이다(WEDO, 2020). 피지는 기후위기 국가적응계획(National Adaptation Plan) 프레임워크에 젠더 관점을 초기부터 통합했다. 국가행동계획 프레임워크에서는 성별 규범과 역할, 차별 등을 검토하고 여성·아동·빈곤완화부(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Poverty Alleviation)를 비롯한 여성관계 부처의 참여를 증진하며, 여성과 젠더 전문가 참여와 성인지 예산 확보 등을 포함한 성인지적 접근을 명시하고 있다(피지 경제부, 2017).

Terry(2008)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성별 권력관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특히 저개발국의 빈곤 여성은 기후위기에 따른 어려움과 장애를 겪기 마련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응하는 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의 통합과 성주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성주류화와 젠더 관점의 통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3월 '기후변화 맥락에서 재난 위험 감소의 젠더적 차원에 대한 일반권고 제

05) 원문과 국문본은 2021년 국 37호⁰⁵⁾를 발표하며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재난으로 여성이 더 큰 위
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유엔 인
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
고」 pp. 355-3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 차별을 더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빈곤층, 선주민, 소수 민족, 인종, 종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여성, 농촌 여성 등은 다른 여성이나 남성에 비해서도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같이 짚었다.

나아가 재난 위험 감소와 기후 위기에 관한 법률, 정책, 행동계획, 프로그램, 예산과 기타 조치 초안을 마련할 때 이용할 원칙으로 △모든 여성의 평등 및 비차별 보장 △모든 수준의 정책 개발·이행·감독 단계에서 여성 참여와 권한 부여 △재난과 기후위기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여성이 합당하고 시의 적절하게 구제책을 제공받기 위한 정확한 정보와 장치를 제공하는 책임성과 사법접근성을 제시했다.

유럽역량강화이니셔티브(ECBI, 2020)가 발표한 젠더 평등가이드에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역시 젠더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합할 것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2001년 제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베이징선언을 상기시키면서, 여성의 권한 부여와 의사결정 과정 참여, 권력에 대한 접근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에 기초한 그들의 완전한 참여가 평등, 발전, 평화의 달성을 위한 기본임을 인정했다.

2014년 채택된 젠더에 관한 리마프로그램 이행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성별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프로세스에 따라 성별 관련 의사결정과 명령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별행동계획의 개발을 의무화했다. 이에 더해 2019년 보완된 리마프로그램에서는 역사적 성차별과 현재의 성차별 등 다차원적 요소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받는 기후위기의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여성이 받는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완된 성별행동계획을 채택하며, 모든 측면과 국가, 지역 차원의 기후 정책과 조치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 있으며 평등한 참여와 리더십이 장기적 기후 목표 달성에 필수라고 인정했다.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한 당사국에는 한국도 포함된다. 한국 역시 여성이 기후위기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 대응하고, 기후위기의 전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성차별의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기후위기와 재난의 성차별적 영향

기후위기의 즉각적, 단기적 영향은 홍수나 산사태, 허리케인 같은 재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많은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기후위기에 취약하다(UN Women Watch, 200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재난 역시 더 빈번하고 심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와 그에 따른 재난은 어떻게 실제로 성차별적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구체적 인 사례를 통해 기후위기의 성차별적 영향을 알아본다.

IPCC와 각종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도 젠더 관점의 기후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연구 중 젠더 영향과 관련한 많은 연구는 부분 저개발국, 농촌, 빈곤 여성의 상황에 집중한다(GGCA, 2016, p. 32). 1991년 방글라데시를 강타한 사이클론과 홍수로 사망한 피해자 14만 명 중 90%가 여성이었다거나,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한 감염병, 즉 에피데믹인 에볼라 감염자 대다수가 집 안팎에서 돌봄을 전담하는 여성이었고, 사망자의 75%가량이 여성이라는 문제제기가 대표적이다. 남반구 저개발국 농촌 빈곤 여성이 기후 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과 도시의 기후재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한국 상황에 참고할 만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은 현재 분석 가능한 수준의 성별 분리된 재난별 통계가 없고, 그나마 연간 통계로 사망과 부상 등 성별 인명피해 현황을 발표하던 재난연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성별 분리 통계가 없어졌다. 이민지·정건희(2020) 등 다수의 재난 연구에서 젠더 특성을 고려한 피해 현황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통계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 상황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저개발국, 농촌 사례보다는 소득수준과 도시화율이 높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유럽, 북미, 호주 등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의 도시 지역 기후위기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먼저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폭우, 허리케인, 폭염 같은 재난이나 극한기후 상황에서 여성의 사망률,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은 편이다(GGCA, 2016). 영국의 데이터 기반 기후위기 언론사 카본

브리프(CarbonBrief, 2020)는 2005년에서 2016년까지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전 세계 130여 건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중 68%에 해당하는 89건의 연구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기후위기로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사망과 상해, 식량 불안, 감염병, 정신건강, 성과재생산건강의 문제가 있었다.

D'ippoliti et al.(2010)에 따르면 서유럽 9개 도시에서 열파에 따른 사망률 증가는 연령, 성별과 큰 관련이 있었다. 75~84세 여성은 호흡기질환자와 함께 높은 일일사망률을 기록했다. 유사하게 손지영 외(2012) 연구에서도 2000년에서 2007년까지 한국의 7개 대도시에서 열파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여성, 노인, 무학 또는 저학력,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염의 성별 영향은 미국, 호주 등지에서는 남성야외노동자, 남성독거 노인 사망률이 높아,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의 인지가 필요하다.

건강 문제를 다룰 때 여성 노인이 특히 염려 대상이 되곤 한다. 일찍이 정순돌·기지혜(2008)는 2006년 호우 피해를 본 강원 인제군과 평창군 노인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호우 재발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실제 재해 발생 관련 지식수준이나 대응 능력은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 농촌 여성의 호우 피해 경험을 분류하고 회복장애요인과 재난극복의 결과를 다룬 이혁구·하민정(2020)은 성별과 연령, 농촌이라는 특성이 교차하는 농촌 여성 노인이 재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젠더기반여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이하 '젠더폭력')은 특히 재난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후 재난으로 오

는 분쟁이나 불안정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한다 (Thornton & Voigt, 2007).

2009년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173명의 사망자와 414명의 부상자, 7,000명의 이재민, 2,030가구 파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검은 일요일'로 불리는 끔찍한 재난 경험과 상실의 감정, 환경 변화 등으로 오는 막대한 압박감은 흡리스, 실직, 알코올의존증, 마약 투약과 함께 가정폭력 증가를 낳았다. Parkinson & Zara(2013)는 양육자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스스로의 남성성에 손실을 입었다고 느끼는 '남성성의 실패' 감정이 가정폭력을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당시 호주 사회에 만연했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Taylor & Mouzos(2006)가 2006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순간적인 분노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가정폭력은 용인될 수 있다”라는 응답이 성별 차이 없이 높았다. 젠더폭력에 너그러운 공동체의 인식이 재난 상황에서 압박감, 분노와 상실의 표출을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는 사회를 조장, 방조한 것이다.

또한 젠더폭력은 자원 접근의 불평등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분쟁 상황에서 상대공동체를 통제하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여성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도구로도 쓰인다(IUCN, 2020). 마치 1990년대 이후 전 시하에서 성폭력이 상대 집단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듯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성폭력이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 자체가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외에도 물성적 재난 복구 정

책 시행으로 성차별이 심해지는 문제도 있다. 재난 복구 과정에서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그대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재난 상황을 맞으면 경제적 피해를 크게 보게 되고 재난 이후에도 이전의 일자리나 소득 수준을 되돌리기 어렵다. Murakami & Durodoye(2008)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 2005년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3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지역을 떠났을 때 여성들은 이주한 곳에서 적응하며 새 삶을 꾸리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Butterbaugh(2005)에 따르면 여전히 허리케인 이후에도 남겨진 이들의 80%가 여성이었다. 뉴올리스언스 지역 여성 넷 중 한 명은 빈곤선 아래에 살았고, 걸프만 전역에서도 빈곤선 아래 수준에서 생활하는 여성이 17~19%에 달했다. 건물 내 대피 방법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대피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동 자체가 어려운 여성도 있었다.

Zottarelli(2008)에 따르면 카트리나 이후 일자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성별은 인종, 자가(自家) 여부, 기존 소득 등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남성 에 비해 고용 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확률이 1.92배나 더 높았다. 재난 복구 과정이 기존 사회를 재건하는 방식, 즉 성차별적인 사회를 재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여성들의 상황과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Butterbaugh, 2005).

4. 재난의 성차별적 영향을 다시 검토하기

앞에서 기후위기와 재난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별만이 기후위기와 재난의 차별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빈곤, 주거환경, 국적 등 다양한 요소가 교차하면서 각자가 마주하는 차별의 양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쪽방촌 및 주거 빈곤층, 이주여성, 장애여성, 청소년성소수자가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짚어본다.

1) 쪽방촌

강준모(2020)는 동자동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1년간 현지 조사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기후변화 인식과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의 역할을 제시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여름의 폭염과 겨울의 혹한은 일상적인 것이며, 기후변화의 특별한 재난이라고 느끼는 대신 일상 재난의 연속 혹은 연장선상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이는 쪽방촌 주민의 이제까지 주거 경험에 따른 적응과 체념임을 지적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이 겪는 기후위기는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취약성임을 강조했다. 또한 쪽방촌의 사회복지는 후원물품 제공 중심으로 일시적인 대안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예륜(2020)은 에너지 빈곤 관점에서 쪽방촌 주민의 삶을 관찰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과 코로나19 사태를 같이 겪으며, 폭염대피소나 쉼터의 사용 제한으로 한층 더 심한 폭염을 겪고 있었다. 쪽방촌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냉난

방을 위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에너지 복지 제도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소외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들은 냉난방 설비가 부족하고 에너지 이용량 제한으로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지며, 기존 에너지 빈곤 지원 정책의 효과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또한 현행 에너지 빈곤정책은 에너지공공성에 관한 논의 부족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는 주거정책, 종합적인 빈곤지표와 기본권 개념이 미비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현주·엄명용(2013)은 기존의 남성에게 집중되었던 쪽방촌 실태를 여성 거주자에게 듣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쪽방에 주거하는 여성 홀몸노인의 삶의 범주를 생계, 관계, 이방인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여성이자 고령으로 복합적인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쪽방촌 주민의 삶을 살펴보면 개인의 책임 외에도 경제위기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쪽방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사회 환경적 맥락이 표면상으로는 쪽방촌 유입을 자발적 선택으로 여기게끔 한다는 것이다. 쪽방촌 입성 후 기존 가족과 지인들 간 관계는 단절되고, 쪽방촌을 중심으로 다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하지만 쪽방촌 주민들은 쪽방촌을 벗어난 구역에서는 고립된 이방인이 되며 반대로 쪽방을 찾아온 외부인에게는 경계도 심하다. 또한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결과 스스로를 소외시키기도 한다.

2) 장애여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는 기후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장애인은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불리

한 상황에 처하며 지원 또한 가장 적게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재난 대응 계획에 이 문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근배(2020)는 OHCHR의 권고사항인 건강권, 시설생활권, 지역생활·자립생활권, 교육권, 기타 권리 영역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리 현실을 지적했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비장애인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특수 상황과 이미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더 위험하다(OHCHR, 2020, 재인용).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장애인은 재난 상황에서 불평등을 겪어 왔으며, 국가 정책의 우선적인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고, 재난 시 그 존재가 무시돼 왔다고 비판한다. 거기에서 장애여성은 상황이 더욱 어렵다. 장애여성은 장애와 성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정훈(2021)은 장애여성인권단체인 장애여성공감이 2018년 창립 20주년 선언문 <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의 독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고유한 정체성과 교차성을 분석하고자 했다. '불구'라는 명칭을 직접 되받아쳐 말하면서 '정상적'이지 않고,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들의 존엄성을 거부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선언문은 '장애 여성'만이 아니라 장애, 몸의 특성, 빈곤,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국적 등에 따라 정체화되는 다른 소수자의 불구화 역시 주목하면서 다양한 교차성을 제시하고, 연대를 강조한다. 신지영(2020)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중심주의와 자본주의가 초래한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인간, 건강, 정상, 생산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재난은 '항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들은 이미 사회와 격리된 채 살고 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코호트화되었으며, 탈시설 장애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생존이 위태로워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평등은 항상적이지 중첩된 재

난이며 시설화로 경험된다고 설명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복지서비스와 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 기준으로 대응되는 재난 상황은 장애인의 자주성을 빼앗고 더 큰 위험으로 내몰기도 한다. 극단적인 기후재난으로 대피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지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회복 과정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3) 청소년 성소수자

Behal(2021)은 블로그 'DownToEarth'에서 기후위기가 불러오는 재난과 감염병 상황에서 혐오와 차별 역시 문제가 되며, 특히 일자리와 경제적 불안정, 정신건강의 차원에서 성소수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고 고발했다. 주변화되고 차별받는, 불평등한 집단이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면, 성소수자를 예외로 여기기는 힘들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울과 고립, 낙인, 혐오 등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지만, 기후위기가 성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실증 연구는 찾기 어렵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지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 학교, 클럽 등과 격리되어 고립되면서 기존의 우울, 자살, 담배, 마약 등에 노출되는 문제가 더욱 증폭되었을 수 있다(Psychiatric Times, 2021). 'Trevor Project'에서 2020년 미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정신 건강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CBS News, 2021).

재난 상황에서는 혐오가 세를 불리기도 한다. 2020년 이태원에서 집단감염이 발발하자 성소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혐오가 불거지기도 했다. 유사하게 Gaard(2015)의 연구에서도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쿼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일어나자 일부 기독교 우파에서 '신이 벌을 내린 것'이라며 성소수자를 비난하기도 했다.

IV. 사례 연구

1.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연구팀은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의 허브이자 인권상담소, 심터인 ‘지구인의 정류장’ 문을 두드렸다. 그곳에서 이주여성농업노동자 티다(가명) 씨, 스레이넛(가명) 씨, 결혼이주여성이자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인 속니은(가명) 씨를 만났다. 그 자리에는 드히티(가명) 씨와 한국인 정지영(가명)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이후 밀양과 이천으로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인권버스에 함께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그 대신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많고 ‘농장주들이 (지역사회를) 꽉 잡고 있다’는 포천에 찾아가기로 했다. 포천은 2020년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던 속행 씨가 사망한 지역이기도 하다. 농장주의 영향력이 강하고, 이주농업노동자의 기숙사 문제가 불거진 포천에서 실제 농사일을 하는 이주여성농업노동자를 만나고자 했다.

포천에서 활동하는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를 통해 캄보디아 이주여성농업노동자를 인터뷰하기로 했으나, 농장주의 외부인 접촉 감시가 심해 결국 만남이 무산됐다. 속행 씨 사망 이후 농장주의 감시가 부쩍 심해졌다고 한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이 외부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농장주의 감시 아래 몰래 만나야 했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노동자가 인터뷰를 취소했다. 그런 연유로 포천에서는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를 만나 농장 주변을 둘러보며 포천 지역의 이주농업노동자들의 상황을 주체

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변 농장을 차를 타고 돌아보는 동안 매서운 눈초리의 농장주를 실제로 두어 번 마주쳤다. 어떤 구간에서는 김 대표의 차를 기억하는 농장주 때문에 속력을 높여 도망치듯 지나가야 했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 당사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관계를 맺으며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연구 주제였으나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웠고 연구원들이 본업을 중시하고 시간을 많이 내기는 어려웠다. 농장주들의 감시를 피해서 만나야 한다는 점도 한몫했다. 포천에서 둘러본 농장 중에는 비닐하우스에 CCTV를 달아놓고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농장주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2명과 관계자 1명, 활동가 2명을 인터뷰하고, 여기에 언론 기사와 기존 연구를 추가해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상

06)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당사 **황을 분석했다.**⁰⁶⁾

자 단체 또는 자원기관에서 직접
기후위기 인식과 영향에 대한 실
태조사를 한다면 더 깊이 있고 당
사자성이 반영된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연구팀이 이주여성농업노동자를 만나고자 한 이유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가 집담회에서 소개한 사례 때문이다. 2020년 여름 52일간의 장마로 물난리가 났을 때 자신의 짐을 챙기기도 전에 비닐하우스를 먼저 정리해야 했던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였다. 일을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일을 하려면 일터인 비닐하우스를 복구해야 하기에 농장주가 그렇게 시킨다. 그래서 물에 잠긴 기숙사 정리와 사라진 자기 짐 찾기보다 논밭과 비닐하우스 복구가 먼저였다는 것이다. 호우로 발생한 수해와 호우복구 기간에 임금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020년 8월 2일 경기도에서 이주농업노동자가 가장 많은 이천시 사례는 이주농업노동자가 호우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드러내준다. 이천시 울면 산양저수지가 집중호우로 붕괴하여 호우피해가 발생했고, 그 때문에 대피소에 머

물게 된 이재민 332명 중 약 80%인 138명이 이주노동자로 집계됐다(시사인, 2020). 이주농업노동자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까닭은 논밭 바로 옆에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로 만들어진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이다(오마이뉴스, 2020). 대피 방법과 위험 상황 정보가 부족해 인지 정도가 낮은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힌다(MBC뉴스, 2020). 즉,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당한 노동, 차별적인 재난경보 시스템이 호우 피해가 이주농업노동자에게 집중된 주요 원인이다.

폭염과 혹한, 코로나19의 상황도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고용허가제와 종속된 노동

한국고용노동정보원 웹사이트(검색일 2021. 9. 10.)에 따르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재입국 취업자(1,310명)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5,090명 이상)를 합쳐 6,400명이 넘는다. 2013년 이후 5,300명에서 5,800명 사이를 유지해 온 E-9 체류자격자는 2021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국내 입국이 어려워진 탓이다. 농업 부문에 한정 신설되어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E-8(계절근로자 장기체류)비자도 시행되지 못했다(한국농업경제연구원, 2020, p. 27). 이주노동자의 입국·재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촌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촌 고령화, 노동인구 부족(프레시안, 2021), 정부의 농업 규모화 정책으로 이주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아졌고, 현재는 '거의 외국인 중심이고 내국인을 쓰는 건 상상도 못하는 수준'이 됐다. 한마디로 지금 농촌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이다(농민신문, 2021).⁰⁷⁾

미등록체류자, 이주노동자로 집계되지 않지만 농업을 전업·부업으로 하는 결혼이주여성

까지 합치면 실제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5년마다 이루어지는 현행 농림어업총조사는 고용 기간별 고용 규모는 알 수 있으나 고용 경로는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고용 규모를 유추할 수는 있으나 정확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태조사를 한다면 더 깊이 있고 당사자성이 반영된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주농업노동자들은 일종의 ‘머슴’ 취급을 받는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휴일 없이, 군말 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언제든 농장주가 쥐고 흔들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심터 및 인권단체 활동가의 말로는 상황이 심각한 밀양의 한 마을에서 이주노동자는 온갖 마을 일을 다 하는 ‘마을 머슴’ 노릇을 한다고 한다(한국농정신문, 2021). 이주노동자가 받고 있는 열악한 처우의 근원에는 고용허가제가 놓여 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농장주에게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자유가 사실상 없다. 그러므로 농장주에게는 노동환경 개선, 임금 향상, 작

08) 2차 자문회의 중 이주노동자 심터 활동가의 발언

업장 안전에 신경 쓸 유인이 없다.⁰⁸⁾ 고용허가제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재난이나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으로 작용한다.

고용허가제는 2003년 신설되어 산업연수생 제도와 함께 시작되다가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 운영되었다(한국농업경제연구원, 2020, p. 37).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외국인근로자(E-9) 체류 현황은 [표 5]와 같다. 채소류, 과채류, 축산이 집중된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체로 경기도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체류 비율이 높다(한국농업경제연구원, 2020, pp. 38-39). 법무부 등 록외국인의 지역별 현황 자료에서 2019년 기준 경기도에서 농업 분야 종사자가 많은 지역은 이천시(2,236명), 안성시(776명), 용인시(633명), 양평군(624명), 고양시(516명), 평택시(501명) 순이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20 재인용).

농업은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여성이주노동자가 많은 분야이다. 농업은 노동 수요가 많고 한국어자격시험 기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취업이 가능하므로 농촌에서 온 20대 초반의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가 많으며, 최근 들어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20, p.37). 하지만 이들은 곧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이주농업노동자 월평균임금은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단위시간별로 따지면 최저임금은 제조업보다 낮다. 또한 같은 농업 분야에서도 여성이주노동자는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이주와인권연구소, 2018).⁰⁹⁾

09) 또한 농업을 제외한 다른 전 영역에서도 여성이주노동자는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

[표 2] 고용허가제 농업 부문 외국인근로자(E-9) 체류 현황

(단위: 명, %)

일상	합계(A)	여성(B)	여성비율(B/A, %)
2008	6,778	1,796	26.5
2009	7,896	2,143	27.1
2010	9,849	2,742	27.8
2011	13,487	3,937	29.2
2012	16,484	4,977	30.2
2014	23,687	7,352	31.0
2015	25,428	8,167	32.1
2016	27,984	9,308	33.3
2017	30,582	10,327	33.8
2018	31,462	10,664	33.9
2019	31,387	10,290	32.8

*출처: 한국농업경제연구원, 2020, pp. 37-38에서 재구성.

고용허가제는 이주여성농업노동자가 수당 없는 추가 근무, 한 달에 두 번도 제대로 못 쉬고 하루 11~12시간씩 이어지는 노동시간, 불합리한 농장주의 명령과 요구, 임금 체불, 무임금 가사노동까지 떠맡게 되는 근본 원인이다. 이주노동자는 일터를 옮길 때도 고용주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에 고용주는 사실상 정당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고

3개월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출국해야 한다. 농장주는 “너, 불법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말로 협박한다. 군소리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라는 말이다. 그 때문에 심지어 고용주,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빨래, 설거지, 식사 준비까지 도맡아야 하는 여성노동자도 있다. 스레이넷 씨가 바로 그 사례였다. 스레이넷 씨는 해본 적도 없는 밥, 빨래, 청소를 못 한다고 폭언을 부지기수로 들었다.

다른 문제도 있다. 김달성 대표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취업활동기간(최장 4년 10개월)에 ‘성실히’ 일했음을 인정받아 재입국하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고용주 협조가 필요하다. 폐업, 휴업, 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 임금 체불, 성적 피해 등이 아닌 ‘상호 간 협의’ 등의 사유로 일터를 옮긴 경우 노동자 귀책사유가 되어 ‘외국인성실근로자’ 제도 이용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사업장 귀책 사유일 때도 빠른 사업장 변경, 사업주 강요 등으로 ‘근로계

10) 2020년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약 해지, 계약 만료’를 사유로 적는 경우가 많다(민주노총, 2020).¹⁰⁾ 문제한 민주노총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 113명 중 63%에 달하는 응답자가 빠른 사업장 변경(37명), 사업주 강요(35%)로 ‘근로계약 해지, 계약 만료’를 사유로 적어 사업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농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이다. 또 대부분의 농장은 농장주 주변 사람의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식으로 편법을 써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노동자 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해고 제한, 주52시간노동, 가산·연차수당 등

11) 김달성 대표 인터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¹¹⁾ 즉, 폭염과 혹한에도 하루 11~12시간씩 휴일 없이 일하는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농장주는 한없이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제약은 이주노동자를 옴매어 운신의 폭을 좁힌다. 어려움을 스

스로 해결하기 어렵게 하고,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피해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이들이 신체적으로 약해서 혹은 태생적으로 무지해서 기후위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면 수명이 5년은 깎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입국한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다 알고 오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고 한다.¹²⁾ 스무 살, 스물한 살, 많아야 스물일곱 정도 12) 2차 자문회의 중 이주노동자 센터 활동가의 발언.인 한창 건강한 나이에 한국에 왔는데도 건강이 나빠질 정도면 대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노동을 한다는 것인가.

정지영 사무국장이 들려준 한 노동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고 걱정하다가 병원에 가서 큰 병이 아니라는 진단을 듣고 울었다고 했다. 부족한 정보, 심한 통증,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마음걱정을 많이 한 것이다. 실제로 이주노동자 중에는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귀국 후까지 추적이 되지 않아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건너건너 소식이 돈다는 것이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젊음을 제도적으로 착취하고 있다.

2) 폭염, 혹한, 호우와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안산에서 만난 여성들은 새벽부터 겨울에 일하면서 걸리는 동상 이야기, 한여름 땀벌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름이 겨울보다 힘들다는 티다 씨는 깻잎농장에서 2년 동안 일했다. 여름에는 깻잎이 잘 자라고, 따야

할 깃잇도 많다. 일이 많아 새벽 6시에 출근해 저녁 6, 7시에야 일이 끝난다. 보통 한 달에 두 번을 쉬지만 여름에는 일이 많고, 비가 와서 평일에 못 한 일을 주말에 하기 때문에 두세 달 내내 휴일 없이 일하기도 한다. 일이 많아서 장시간 노동을 해도 농장주는 “네가 일을 못 해서 더 일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노동을 노동자 잘못으로 돌린다.

40도를 육박하는 폭염이 잦아지고 있으나 대책이라고는 달랑 차광막 한 장 뿐이다. 티다 씨는 일터가 산 위에 있어 한여름에도 자전거로 올라갔고, 한 시간짜리 점심시간도 오고가는 데 10분 씩 쓰면 고작 40분만 쉴 수 있었다고 했다. 여름엔 몸도 안 좋고 자주 어지럽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스레이넷 씨는 6월까지 넉 달 일하는 동안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고작 181만 원을 받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고, 13만 원을 자신의 월급에서 내야 해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더 적었다.

폭염이 아니라고 해서 상황이 낫지도 않다. 폭우나 장마 때는 비가 올 때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나가야 한다. 작년에는 물이 정강이까지 차올랐을 때도 일을 해야 했다. 물이 차 있으니 깃잇을 따는 잠깐 사이에 바구니가 동동 떠내려가고 말았단다. 장마가 길었던 작년에는 일을 못 한 만큼 월급이 깃얏다고 한다.

“홍수로 일 많이 못 하잖아요, 깃잇도 많이 상하고 해서. 쉬는 날이 많다고 월급도 적게 받아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네 시간을 일하다가 비 많이 오고 번개도 치고 있

어서 사장이 자기 집에 데려가고 있다가 비가 그치면 다시 데려와서 또 일한 적도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니까 집에 가서 쉬라. 쉬면 우리도 옷 갈아입고 쉬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치니까 다시 와서 일 하라고. 만약 일 안 하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원래 쉬는 날 인데 이번에 쉬는 날은 다음에 쉬는 걸로, 그리고 월급도 깎고….”

겨울은 어떨까. 티다 씨는 말했다.

“일할 때는 비닐하우스 안이 너무 춥고 옷도 많이 입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해요.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고 동상에 걸린다. (연구팀: 비닐하우스 안에 난로 같은 것 있는지?) 전기난로 있는데 그래도 춥고 세 개 다 놓아도 춥다. 일하고 한 삼십 분 후에야 괜찮아져요.”

스레이넷 씨는 올겨울에 한국에 도착했다. 따뜻한 나라에서 갑자기 추운 곳으로 떨어지니 적응도 힘들었다. 자가격리 후에는 치커리농장에서 치커리와 상추를 따다. 새벽부터 일을 하러 나오지만, 문제는 3월까지도 춥다는 점이다. 손바닥과 손가락 껍질이 다 벗겨졌다고 했다. 장갑을 끼니 통풍이 안 돼서 더 나빠졌다. 티다 씨는 동상이 더 심했다. 만날 당시에는 치료를 받아 그나마 나아졌으며 올초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다. 사진 속 손바닥은 갈라져서 빨강게 피가 나 있었다. 그러나 농장주는 병원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장갑을 벗고 하라’며 넘어갔다고 한다. 맨손으로 깻잎을 훑는데, 무척 아팠다고 했다.¹³⁾

13) 농한기에는 따뜻한 남쪽지방으로 ‘파견’ 노동을 시키기도 한다.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횡행한다. 농장주가 겨울에 일이 없다고

임금을 주지 않으니 노동자 입장에서 돈을 벌려면 다른 곳에 가서 일이라도 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다.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 농업 특성상 정부는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미 농축산업 취업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 노동자들도 계절 따라 일터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것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티다 씨는 겨울에도 일이 많아서, 스레이넛 씨는 한국에서 겨울을 나지 않아서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 그러나 밀양 같은 곳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동행한 한국인 활동가가 알려주었다.

한여름 땀벌레, 한겨울 뒀서리에도 휴일 없이 장시간 일하는 상황, 산업재해임에도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들에게는 이미 일상이었다. 재난은 일상처럼 스며들어 있었고 위기는 새삼스럽지 않았다.

한국어 위주로 된 재난경보시스템도 문제였다. 작년에 물난리가 심했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냐고 물으니 “그런 거, 비 오나 안 오나 모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정지영 사무국장이 덧붙였다.

“저희도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막 이렇게 물이 막 흘러가는 걸 찍어서 자기들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저희한테 보내줄 때 이렇게 심각하구나 알았지. 사실은 이 친구들이 보내주는 게 뉴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더 정보가 아마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난경보도, 대처 방법도 알지 못한 채로 재난을 당했을 때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주는가.

3) 논밭 옆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기숙사

주거권 역시 떠오르는 문제이다. 기후위기는 폭염, 혹한, 가뭄, 폭우 등 극한 기후와 재난, 감염병과 같이 온다.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살만한 집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본래 사람이 살 수 있

는, 집다운 집이 아니다.

컨테이너에 검은 차광막으로 덮개를 씌운 비닐하우스는 원룸 정도의 크기이다. 2~4명이 큰 방을 같이 쓰거나, 여러 개의 작은 컨테이너가 길게 붙어 있는 형태로 각방을 쓴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닐하우스는 창문도 없고, 햇볕이 잘 들지도, 환기도 잘 되지 않는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비닐하우스는 농장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열 발짝 걸으면 기숙사인 셈이다. 언제나 노동자들을 ‘상시 대기’ 상태로 만들어 놓기 위한 농장주의 술책이다.

포천 농장을 함께 둘러본 김 대표는 말했다.

“농사일이라는 게 24시간 대기를 해야 하니까. 밤에 뭐라도 떨어지면 가서 세워야 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여름에 비라도 오면 자다가도 깨서 확인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지어놓고 여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연구팀: 차로 왕복 30분이 안 걸리는 포천시내에 월세 30만 원이면 신축 원룸을 구할 수 있다던데...) 못 가게 하죠. 허락을 안 해.”

김 대표는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다.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어쨌거나 ‘숙소’이므로 가정용 전기를 신청해서 써야 하지만, 농장주들은 농업용 전기를 끌어다 쓴다. 농업용 전기는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하고 누진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목적대로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쓸 수 있는 전력량에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는 냉난방을 하기에 충분한 전력은 공급되지 않는다.



[그림 7] 야외에 덩그러니
설치돼 있는 화장실
(사진출처 : 김달성 대표)



[그림 8]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농장에 붙어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2020년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사망한 속행 씨가 머물던 포천 비닐하우스 기숙사도 누전차단기가 계속 내려갔다. 냉장고, 세탁기, 다른 전기장치를 다 뺐는데도 계속 누전차단기가 내려가서 밤새 차단기를 올렸다 돌아오기를 반복했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 2021). 이렇게 누전차단기가 계속 떨어졌던 이유는 전력소비가 큰 난방기구를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은, 제대로 된 전기조차 제공하지 않는 기숙사에, 농장주에게 있었다. 속행 씨 사망사건 이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가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없었다.

심지어 농장주는 숙소 제공이라는 명목 아래 임금에서 기숙사비를 공제한 다. 심한 곳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와이파이어금, 식비 등을 따로 받기도 한다. 김 대표에 따르면 포천은 공과금을 포함해 18만 원에서 25만 원이 평균 월세이다. 그러나 많은 곳은 35만~50만 원을 받기도 한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안전 문제도 안고 있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안이 무척 허술하다. 화장실이 밖에 있고 가로등도 없는 경우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를 꺼리는 노동자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장주, 다른 노동자와 기숙사를 같이 쓰는 경우도 많으나, 성별 분리된 기숙사에 사는 여성노동자는 응답자의 19.4%에 불과하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20). 외진 농장에서, 익숙한 말로 신고하고 지원받을 곳도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4) 코로나19, 고립과 지원체계 미비

실제로 성폭력 문제는 수면 아래 감춰진 문제일 수 있다. 2016년 연구에서는 한 번이라도 한국에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동안 성폭력을 당해 본 이주여성이 202명 중 25명으로 나타났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성폭력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68명이었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는 농촌, 개별 농장에 떨어져서 생활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어려워 표본 모집, 설문 문항, 성폭력 정의와 범위 등에 따라 이전 조사에서도 성폭력 경험이 7.7~41.7%로 편차가 컸다. 다만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이들은 대다수가 지속적으로 한 번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으며, 주로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피해를 경험했다. 농장주의 절대 권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공간 분리가 되지 않아 가해자와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례도 있었다. 재난과 성폭력의 문제를 들 때 재난대피소와 같이 성별이 구분되지 않고 안전성이 떨어지며 자원이 부족하고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다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별 구분이 되지 않고 잠금장치 없는 숙소, 절대적인 위계질서와 자원의 불평등은 일상 속의 문제였다.

성폭력 소문을 들었다는 수와 경험했다는 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데 기인할 수도 있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20).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할 수 없고, 신고를 해도 자국어 통역, 이주여성쉼터 등이 부족해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스레이넷 씨는 폭언을 퍼붓고 돌봄노동을 강요하며, 휴식도 없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장 밑에서 일했다. 알고 지내던 한국인에게 대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한국인은 오히려 농장주와 친한 다른 이주여성농업노동자에게 스레이넷 씨의 상황을 알렸다. 베트남에서 온 다른 이주여성노동자는 농장주에게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라'고 일러줬다. 나중에 스레이넷씨가 진성서를 내자 농장주는 폐업신고를 해버렸고 스레이넷 씨를 '불법' 이주민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게다가 스레이넷 씨는 코로나19가 막 확산되던 작년 2월에 입국했다. 자가 격리 정보가 전혀 없었고, 농장에 도착하자 농장주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방안에서 자가격리를 시켰다. 정지영 사무국장은 말했다.

“(농장에) 왔는데 사장님이 ‘이제 가자’ 해서 사장님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개인 아파트에서 방 하나 주고 자가격리를 하게 된 건데 뭘지 모르고 오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해요. 근데 이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자가격리에 하루 10만 원이 든다. 그래서 140만 원을 월급에서 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해야 한다 하고. 사장님은 이거(140만 원)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그걸 월급에서 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갇혀 있으면서 사장님이 수시로 왔다갔다.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은 되어 있고, 돈은 돈대로 140만 원 떼 가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로 외출도 금지되고, 옆 동 이주노동자들과 대화가 금지된 곳도 있다. 옆 동에 사는 같은 캄보디아 노동자들과도 말을 섞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파(가명) 씨는 전 고용주에게 받아낼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일조차 거절당했고, ‘지구인의 정류장’을 통해 농장주를 설득해서 가까스로 다녀올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농장주는 보파 씨를 옆구리에 끼고서 전 과정을 밀착 동행했다. 코로나19로 농장주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심해졌고, 고립도 심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5) 이주노동자, 스스로를 구하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돕고 있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은 페이스북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했다.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어 커뮤니티가 잘되어 있고,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한다. SNS를 통해서 멀리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연락할 수 있다.

그러나 SNS가 으레 그렇듯 가짜뉴스가 같이 퍼진다는 문제가 있다. 속행씨 사망사건 때는 '시체를 판다'는 가짜뉴스가 캄보디아로 많이 퍼졌다고 한다.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포천나눔의 집 이주민지원센터 '살림의 집', 포천이주노동자센터처럼 이주노동자 쉼터와 인권단체도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함께 모여 안정을 취하며 머무르거나, 교류를 하기도 하고, 이주노동자 인권운동도 한다. 지구인의 정류장은 올해 '이주노동자 인권버스'를 운영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했다. 정지영 사무국장은 한번 다녀온 사람은 없는 휴일을 쪼개서 또 참여할 정도라고 말했다. “우리는 머슴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라고 부당함에 항의하고, 다른 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고, 다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활동이 당사자들에게 큰 뿌듯함을 주는듯 했다.

2005년 결성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는 2020년 5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않는 고용허가제가 위헌이라며 고용허가제를 악용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고용주 입장에서 노동자를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에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허가제

로 변화하게 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점 자체가 변할 수 있다. 또 사업장 선택과 변경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주노동자가 갖게 된다면, 더이상 농장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붙박이 가구처럼, 언제나 제공되는 인력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해야하는 노동자로서 대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¹⁴⁾

14) 2차 자문회의 중 이주노동자
쉼터 활동가의 발언

드히티(가명) 씨는 한국 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졸업 후 연구실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가끔 이주노동자 쉼터 겸 인권단체에서 활동도 한다. 지금은 지도교수와 함께 다국적 언어 날씨 애플리케이션('Rainbird GE')를 세팅하고 있다.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영어 등 여러 나라 말로 날씨 정보를 번역하고 재난 경보를 번역해 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한국어 위주라 이주노동자가 날씨와 재난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과거에 비하면, 적어도 기후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문제는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정부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기후정보와 재난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동자동 쪽방촌 여성 주민

집담회 후 기후재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주거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쪽방, 고시원, 길거리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여성을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는 집담회에서 상당 부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심층 인터뷰 때는 쪽방촌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했다. 서울의 5대 쪽방촌으로 종로구 창신동, 익선동, 돈의동, 용산구 동자동, 영등포에 쪽방촌이 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지원 조직이 있는 동자동 쪽방촌을 살펴보

기로 했다.

하춘·김혜민(2020)에 따르면 쪽방은 대부분 보증금 없이 24만~25만 원의 월세를 내고 한 평 남짓한 공간과 공용 화장실, 주방을 사용하는 형태로 정의한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는 316개의 쪽방 건물에 3,855개의 쪽방이 있으며, 3,183명이 거주하고 있다.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을 포함한 용산구 쪽방촌의 주민은 총 1,054명으로 집계되었다.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사업 실패나 실직 혹은 질병 등으로 가족, 친지와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이며, 남성이 약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50~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높다. 그중 약 53%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김다운 외(2017)에 따르면 근로활동이 가능한 약 22.5%의 주민만 일당 잡부, 폐지 수입 등 단기 일 자리에 종사한다. 하지만 그마저도 매우 불안정한 수입 탓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표 3] 서울시 쪽방 주민 현황

구별		쪽방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홀몸노인	장애인
		계	남	여			
합계		3,183	2,752 (86%)	431 (14%)	1,674 (53%)	1,041 (33%)	315 (10%)
종로구	돈의동	570	537 (94%)	33 (6%)	283 (50%)	195 (34%)	55 (10%)
	창신동	328	275 (84%)	53 (16%)	140 (43%)	124 (38%)	36 (11%)
중구		717	639 (89%)	78 (11%)	323 (45%)	187 (26%)	34 (5%)
용산구		1,054	922 (87%)	132 (13%)	558 (53%)	331 (31%)	137 (13%)
영등포구		514	379 (74%)	135 (26%)	370 (72%)	204 (40%)	53 (10%)

*출처: 하춘·김혜민(2020),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 쪽방을 중심으로.

인터뷰 섭외를 위해 김미영(가명) 전 녹색당 혁신위원장과 사전 인터뷰 때 소개받은 동자동사랑방의 활동가에게 연락했고, 다시 박승민 활동가를 소개받았다. 박승민 활동가의 제안으로 1대1 인터뷰보다 집단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고, 동자동사랑방 식도락에서 동자동 주민을 위한 급식소 봉사활동을 하는 동자동 주민, 이숙자(가명), 고경례(가명), 최정미(가명) 씨를 인터뷰했다.



[그림 9] 인터뷰 중인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

동자동을 포함한 5대 쪽방촌의 기원은 성매매 집결지이다. 도심의 슬럼화된 지역에 최빈곤층이 모여 살면서 지금의 쪽방촌이 형성되었다. 동자동의 경우 서울역 맞은편이자 후암동 아래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상가와 공존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 인터뷰 참여자 세 분을 만나기 위해 동자동사랑방을 찾아갔을 때 사랑방 식도락이 식당과 숙박업소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평범한 가게를 몇 군데 지나 찾을 수 있었다. 동자동은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후암동이나 해방촌과 가까웠다. 해방촌으로 가는 길에서 봤던 익숙한 길 사이에 쪽방촌과 쪽방촌 바로 옆에 서울에서 상당히 비싸다고 평가되는 아파트가 있어 괴리감마저 느껴졌다. 이렇듯 가장 노후되고 빈곤한 마을이 서울의 가장 노른자 땅에 숨어 있었다.

인터뷰는 2시간 정도 긴 시간 진행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일정 조율 등 시간적 한계로 라포 형성이 부족했고, 충분한 신뢰감과 친밀감 형성이 조금 부족했다. 박승민 활동가의 말로는 평소 말씀이 많으신 분들이지만, 낯선 사람에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연구팀을 따스하게 맞아주며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밖에 기사와 사전연구 등 문헌연구에서 읽었던 상황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박승민 활동가와 이뤄진 추가 인터뷰로 도움을 받았다.

1) 쪽방은 여성에게 공포와 고립의 공간

사전 인터뷰, 집담회, 각종 사전연구 등에서도 알 수 있었듯, 쪽방에 거주하는 여성 비율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인지 쪽방촌의 실태를 조사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여성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간혹 특집 기사로 여성 쪽방촌 거주자의 인터뷰를 참고하는 것이 그나마 큰 도움이 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동자동 주민 세 분도 남자가 100명이면 여자가 20명 정도라고 가능했다. 그리고 남자가 많은 만큼 죽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여름, 겨울에 죽는 건) 다 남자다. 술 마시는 것도, 술 마셔서 죽는 것도.”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아닌, 술이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속해서 남성 거주자의 얘기를 전해 듣다가 여성 거주자의 상황에 대해 운을 뚫다. 왜 쪽방에는 유독 남성 비율이 높은지, 다른 여성분들과 교류는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20명 정도도 소위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교류하는 분이 없다는 것이다. 동자동은 비교적 공동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자동사랑방과 활동하는 사람은 세 분을 포함한 넷뿐이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은 식도락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라고 답했다. 오늘 나오지 않은 한 분은 몸이 안 좋아 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밖에 활동하지 않는 여성 주민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들은) 집에서 밥도 안 해 먹고 다녀요.”

“정상으로 보는 여자가 아니지. 서울역에서 (머리 옆으로 동그라미 그리며) 요래요래 하는 사람들로 보면 되지. 말짱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 이거지.”

인터뷰에서 얻지 못한 이야기는 한겨레 기사(2019)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기사에서도 한 건물 한 층에 남성 9~10명이 입주하면 여성 1~2명이 섞여 있다고 했다. 밤마다 남성들이 여성들의 방문을 쳐댔고,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거리에선 도망이라도 가지만 쪽방처럼 밀폐된 곳에선 그러지도 못한다고 했다. 폭염이나 혹한, 외로움은 견딜만 했지만 ‘공포’는 그러기 어렵다는 여성 주민의 증언이었다. 박승민 활

동가의 증언에서도 쪽방촌 여성 거주자의 공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전에 동자동에 거주하던 여성 거주자가 성폭행 피해를 보고 표면적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그분의 성격이 눈에 띄게 내향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이다. 쪽방에 들어오는 여성 주민 중 다수는 지적장애가 있어 방치된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애와 경제적 빈곤에 따른 주거 취약성이 성폭행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박승민 활동가는 쪽방에서 이뤄지는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 맺음과 다르고, 쪽방촌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이 체화되어,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했다. 많은 주민이 다양한 이유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쪽방촌 내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분리되고 고립되어 있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이주여성노동자(주로 재중동포)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더욱 단절되고 소외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견디고 있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품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의료서비스 접근도 어려웠다. 쪽방촌의 삶이 개선되고, 이런 만성적인 패배감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맺음이 중요하지만 쪽방촌의 외부 단절과 내부 단절이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물론 일시적인 후원과 지원이 있지만, 외부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부족하고, 쪽방촌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환경 또한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 최소한의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비싼 집

쪽방에 관한 세 분의 증언은 계속됐다. 쪽방촌은 최빈곤층이 모여 있는 곳이고, 집주인들은 싼 만큼 시설이 좋을 순 없다고 말하지만, 쪽방은 싸지도, 최

소한의 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 통계적으로 쪽방촌의 월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하준, 2020). 최근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사했다는 이숙자 씨가 5평쯤 돼 보이는 식도락 부엌의 한쪽 편에서 식탁을 펴 둔 1평 남짓한 공간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 포함해서 월세 17만 원 하다가 이사와서 23만 원에 가스, 수도, 전기요금 따로. 복도가 있어서 집도 크고 그건 좋아. 복도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이만한 데에 딱 끼어 상 펴서 먹고. 한 명은 앉고 한 명은 누워야 해. 요거 하나가 방이야.”

1평 남짓한 공간이 월세 23만 원이라니, 보증금이 없다고 해도 상당히 비싼 편이다. 2019년 EBS 다큐 시선의 “빈곤 비즈니스, 쪽방촌의 비밀”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수와 월세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와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비싼 쪽방에는 충분히 깨끗한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조차 없다. 쪽방 내 샤워실, 화장실은 다 공용이고, 싱크대도 별도로 없어 한곳에서 같이 쓴다고 했다. 방에서 지내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했다.

“1층에 샤워실 하나 화장실 하나. 이 아줌마 쌀 씻으면 나 기다리고 있고, 샤워하면 나 또 기다리고 있고. 아줌마들 샤워하고 있으면 아저씨 못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아주 지저분한 데는 쌀 씻는 데서 남자들 오줌 누고. 어떻게 다 말해. 한도 끝도 없어.”

쪽방은 그 자체로도 지내기 힘들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조금 더 힘들다.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모기장 하나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자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성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여름에 너무 더워도 문 못 열고, 방안에서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버틴다고 했다. 최근 주변 교회 목사님이 에어컨을 설치해 줬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못 쓴다고 했다.

“(더울 때 밖에서 더위 피하는 건) 다 남자야. 여자들은 너
무 더워도 집에 있지. 샤워하고, 선풍기 틀고, 집에 있고.”

장마나 폭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내자, 세 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빨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폭우와 폭염, 외부에서는 충분히 인지되는 어려움이, 쪽방 내부에서는 일상적인 피해의 연장선으로 치부되고 좀더 견뎌야 하는 정도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다행히 세 분은 더운 날이 계속될 때는 식도락에 와서 지내면 되니까 괜찮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위한 공간이 세 분에게는 비교적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다.

박승민 활동가의 말에 따르면 쪽방은 개별적인 전력 계량기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대부분 월세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내고 있는데, 쪽방의 집주인이 에어컨을 못 쓰게 하는 곳이 많다고 했다. 게다가 전력 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도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고 주민들이 전기요금에 과도한 두려움이 있어 에어컨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기사(2019)에서 또 다른 지역 같은 쪽방 여성 주민의 여름나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운 여름이면 지붕 아래에서 밤을 난다는 게 오히려 고역

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이웃들이) 여자가 산다는 걸 아니까, 도저히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밤새 방에 습기가 가득 차 공원에 나와 바람을 쐬기도 하고, 잔다기보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3) 공공주택사업 문제, 이사 문제

동자동 쪽방촌 입구와 사랑방, 식도락 곳곳에 ‘공공주택 사업 환영’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2021년 2월 정부가 서울역(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고, 쪽방 주민자치모임은 환영했다. 주민들이 모두 바라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

“여기도 있어요. (공공주택환영 벽보가 붙어 있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 우리는 여기서 아파트 지으면 들어하려고 하고 자기네(집주인)는 내놓으면 (이익이) 생기는 게 없잖아.”

여기 용산구 동자동은 서울의 노른자 땅으로, 서울역 맞은편 최도심에 위치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재개발에 공들여 온 동네이지만, 아직까지 사업 진척의 기미는 없다. 동자동은 남산의 조망권 때문에 용적률과 층수의 제한이 다른 도심보다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재개발과 빈곤비즈니스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투자를 위해 쪽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매입하여 관리자를 두고 실제로는 타지에 사는 건물주가 대다수였다(한국일보, 2019).

“(건물주) 대부분이 월세 내놓고 안 살아. 2층만 몇몇 살아.”
“(공공주택사업 해서) 우리 없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돈 받아 먹어?”

세 분에게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으로 가실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몇몇 주민이 임대주택으로 나가기도 한다고 했지만 세 분은 임대주택으로 가려고 해도 보증금이 300만~400만 원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했다. 저금조차 어려운 생활에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박승민 활동가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주거 형태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이유로 쪽방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쪽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쪽방에 사는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회 시스템과 차별적 시선이 쪽방의 취약성을 가중한다고 꼬집었다.

4)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쪽방촌

코로나19 방역 관련 안내 문자,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 재해경보 안내 문자 등 요즘은 정보가 너무나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수신된다. 하지만 쪽방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은 고령인 탓에 스마트폰 기능은 고사하고 문자 사용도 어려워한다. 게다가 깊은 관계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의 교류와 소통이 느리다. 쪽방촌 주민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분은 적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기점으로 모든 정보, 긴급하고 중요한 정보조차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달받는 요즘 시대에 고령의 쪽방촌 주민

들의 고립은 심화됐다. 식도락에 TV가 있기에 TV를 가리키며 평상시에 뭐하며 지내시냐고 물었다.

“티비도 보고, 여기 티비 원래 없었는데 밤까지 여기서 지내니까, 박(승민) 간사님이 뵈웠어요. (쪽방에 있는 건) 유선도 안 돼요. 테레비 모냥만 있어. 본방송 잠깐잠깐 아침저녁에 보지 뭐.”

5)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는 여성들

동자동사랑방 식도락의 세 분은 식도락, KT 카페, 상담소 등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친해졌다고 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동자동 이곳저곳에서 봉사를 해 왔다고 한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시락을 만들며 매년 70개에서 90개까지 준비하는 게 고될 만도 한데 힘든 내색 하나 없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식사하실 때 어느 정도 드시게끔 해 주니까, 한 달에 두 번은 그래도 잘 잡쉬요. 특이한 거는 먹는다 이거지. (연구팀: 얼마 전 초복에는 뭐 드셨는지?) 삼계탕. 여기서 해드렸어요. 중복 말복 다 해드려요. 수박이랑 이런 거 다 여기서 해드려. (연구팀: 힘들지는 않으신지?) 힘들다고 생각하면 봉사 못 해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면 못 해요. 그냥 내 스스로, 우리가 힘들면 한 분이라도 더 드시고, 그럼 건강해지고, 그런 재미로 하는 거지. 열한 시 되면 다 오셔. 그러면 바로 가져가셔서 따뜻하게 드실 수도 있고...”

인터뷰 하러 간 당일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식도락 세 자매는 이런 더운 날에는 식도락에서 봉사도 할 겸 더위도 피하고, 서로 얼굴 보고 안부도 전할 수 있다며 식도락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3. 비교 분석과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 기후재난에 따라 겪고 있는 문제를 [표 4]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기후위기와 관련 재난 상황에서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주민 비교

	이주여성농업노동자	동자동 쪽방촌 여성주민
주거	·폭염, 한파, 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를 영위하고 있지 않음	
	·패널로 만든 비닐하우스 기숙사 거주를 농장주가 강요함 ·농업용 전기 사용으로 냉난방기기 사용 어려움	·1평 남짓한 쪽방에 공용 화장실, 주방, 샤워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함 ·대체로 별도의 전력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집주인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함
정보 접근성	·기후재난 상황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됨	
	·서울 중심의 한국어 위주로 한 기후, 재난 상황 보도로 정확한 기후 정보를 얻기 어려움 ·SNS를 통해 이주민들끼리 정보 공유	·고령 인구가 많아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어려움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짐
관계망 부족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관계망이 부족함	
	·일터와 거주지가 농장이므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음 ·농장주 도움, 허락 없이는 병원 방문, 이동, 외부인 만남 등 사회적 관계 맺기와 외출이 어려움	·주민이나 외부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어려워 동자동사랑방의 정보에 의존함 ·코로나19로 외부 지원도 줄어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감시가 심해지면서 농장주 의존과 사회적 고립이 심해짐 	
폭력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언, 성폭력 등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대 초반의 이주여성이 고립된 환경과 위계 관계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폭언, 폭력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언어별 심터, 통역, 성폭력상담소 등 지원시스템이 부족함 ·코로나19로 농장주 의존과 단절이 심화되면서 특히 여성들에게 위험이 높아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의존증 문제가 있거나 더울 때 상의를 벗고 다니는 남성이 많아 스스로의 성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챙기게 되는 거주환경 ·폭염과 열대야에도 폭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성과 달리 방안에 머무르며 견딜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여성 전용 심터나 공간이 부족함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을 폭염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수행해야 함 ·동상, 어지러움, 허리통증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산재처리, 병원 치료도 쉽게 할 수 없음 ·기숙사에서 돌봄노동까지 무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활동이 가능한 주민은 22.5%이며, 그마저도 일당 잡부, 폐지수입 등 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며 매우 불안정한 수입으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음
정부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폭염 호우 대책 등 정부 대책에서 제외됨 ·속행 씨 사망사건 이후 비닐하우스 기숙사 전수조사, 고용허가제 제약 등의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제로는 유아무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복지체계 안에 편입되어 있고 기업 후원 등을 받으나 분절적, 시혜적임 ·에너지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기 어려움
당사자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주에게 종속된 상태이므로 농장주를 거스르거나 반대하기 어려움 ·속행 씨 사망사건 이후 이전보다 주거, 노동시간, 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활발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난과 필요를 증명하게 되어 있는 정부 복지체계와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 체화된 무기력으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팔자소관'이나 '운'으로 돌리며 감내하려는 경향이 있음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열악한 주거, 정보 접근성 제약, 고립과 사회적 단절, 폭력 위험이 있다.

폭염, 수해, 한파, 코로나19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난에서는 위험을 피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최저주거 기준마저 맞추지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는 제한된 외출을 제외하면 비닐하우스 기숙사와 농장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생활하며, 동자동 쪽방촌 주민 역시도 동자동 내에서 식도락, 공원, 자신의 방을 중심으로 생활한다. 이들에게 주거는 생활의 중심이고,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공간이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열악하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15) 반빈곤활동가 인터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¹⁵⁾

연구팀이 만난 홈리스, 동자동 쪽방촌 주민, 이주여성농업노동자,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절실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지 못했다. 반빈곤활동가가 들려준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사는 주거빈곤층 역시 마찬가지이다.

폭염, 한파, 수해, 감염병, 태풍 같은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에 사망하고, 습하고 답답하고 덥고 추운 집에서 참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집다운 집이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절실하다.

특히 주거 안전이 여성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

다. 제대로 된 문고리도 없고, 화장실은 외따로 떨어져 있고, 가로등조차 없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사는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 폭염과 한파에도 혹시 모를 위험을 걱정하며 방에 머무르는 동자동 쪽방촌 여성 주민들은 젠더폭력 위험이 내재화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식도락처럼 비교적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는 제한적이다. 젠더폭력의 문제와 안전의 관점에서라도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명제는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 인권위원회는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를 의미하는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 건강권, 생명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요소”라며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를 내린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최저주거 기준을 개정하고,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고, 주거급여를 상향하고, 주거빈곤과 에너지빈곤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으로 분절된 주거 지원제도를 연계, 통합해야 한다. 그와 함께 여성 전용 쉼터를 늘리는 등 여성이 경험하는 주거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주거권은 기본권이다(이유진, 2021).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주민이 겪는 두 번째 공통 문제는 제한된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단절이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농업노동자는 한국어, 서울 중심의 기후재난 상황 경보 탓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기후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난문자가 2019년 말부터 영어, 중국어로 제공되고(행정안전부, 2019), 부산,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국적 기상정보를 제공하기는 하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 대신 이주노동자들은 SNS를 통해 서로 재난 정보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쉼터 활동가는 활동가들이 제보받은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SNS를 통해서 공유된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드히티 씨가 참여한 다국어 기후정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도도 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달리 지리적으로는 서울의 중심부에서 생활하므로 기후재난 상황 정보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16) 2차 자문회의 중 동자동사랑 만 고령 인구 특성상 휴대전화로 재난 경보를 확인하거나 직접 문자 방 활동가의 발언. 를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는 등의 사용을 어려워한다.¹⁶⁾ 이들에게 중요한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정보 대신 부정확한 소문이 더 널리 퍼져 있었다.

동자동사랑방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정보 제공, 외부 연락, 물품 전달 활동을 해주는 덕분에 주민들이 겪는 제한된 정보 접근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과연 충분할까.

정보 접근성 제약은 외부 사회와 맺는 관계망이 부족하다는 점과도 연관된다.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외부 사회와 경계가 있는 생활을 하는 까닭에 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로를 돌보고 챙길 수 있는 외부 관계망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관계 맺기는 외부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과 다르다. 과거나 배경은 중요하게 얘기되지 않으며, 동자동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분들도 있다.

동자동 사랑방 활동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약 1년간 지원이 끊겼다고 했다. 아무도 동자동을 찾아오지 않았다. 위험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곳, 관계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발생할 때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은 외부 지원과 돌봄이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 할 수 있을까.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은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농장주에게 종속되어 있다. 폭염, 수해 등의 재난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은 그 자체로 이미 위험하다. 코로나19는 외부 접촉을 제한하여 농장주 의존과 노동자들의 고립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고립은 폭력, 폭언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낸다. 지리적으로 농촌지역, 논밭 한가운데서 24시간을 생활하는 특성상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은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연구팀이 만난 이주노동자쉼터는 안산에 있는데도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찾아온다. 노동자들은 멀리까지 찾아오는 이유를 ‘우리 편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20대 초반의 이주여성이 고립된 환경과 위계 관계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폭력, 폭언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쉽사리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지역별, 언어별 센터, 통역, 성폭력상담소 등 지원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그 밖에도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경우에는 열악한 노동 문제와 정부 정책 내의 비가시화 문제가 두드러졌고, 동자동 쪽방촌은 분절된 정책과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복지제도 속에서 삶을 개선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이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주거시설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이들은 쉽게 떠나지 못한다. 이들을 묶어매는 제도적 제약 때문이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가 이들의 의사에 반해 한 농장에 계속 머무르거나 부당한 노동을 참고 견디게 만든다. 여기에 농업이라는 특성이 더해지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너무나 쉽게 용인된다.

쪽방촌 여성들의 경우도 비슷하다. 비교적 가시화되어 제도적 지원 체계와 민간 후원의 안으로 들어온 쪽방촌을 떠나는 일은 모든 지원을 뒤로 하고 스스로의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겠다는 말과도 같다. 거기에 냉난방비까지 더해지면 선뜻 이 지역을 떠날 마음을 먹기는 쉽지 않다. 가난과 필요를 증명하게 되어 있는 복지체계와 정부 지원의 칸막이에 따라 통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주소지가 쪽방촌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에서 탈락하는 이들에게 쪽방촌 밖은 선뜻 발을 내딛기 어려운 곳이다.

이처럼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사회적으로 무기력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쪽방촌과 옥탑방,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취약한 주거와 빈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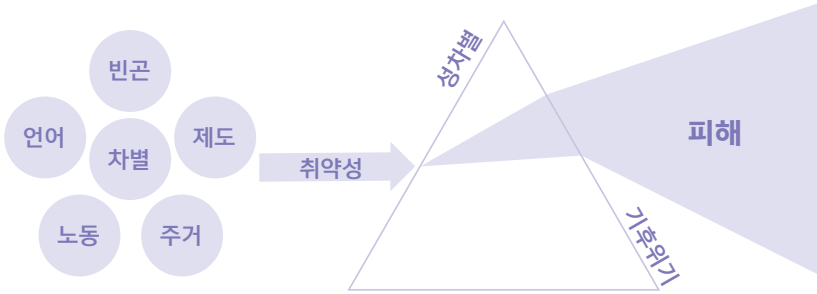
참고 견디려는 경향을 보인다.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하며 폭폭 찌는 날씨와 살을 에는 추위, 시끄러움과 폭력의 공포, 불편함과 고립을 참고 견디는 것이다. 계속해서 빈곤과 수치 필요를 증명하도록 짜인 복지체계와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함께 변화해야만 한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들은 여전히 농장주에게 종속된 노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행 씨 사망사건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주거와 노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일이 늘면서 노동자 스스로도 노동시간, 저임금, 주거환경을 제보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전에는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일을 문제로 인식하고, 제보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사는 집에서 살고 사람이 일할 만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변경하고, 이주농업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노동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사회·정치·경제·문화적 이유로 빈곤, 제도상 불평등, 불합리한 노동 같은 문제는 기후위기와 맞물려 강화된다. 가령 기후위기 이전에도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그 자체로 위험한 노동이었으나, 폭염, 한파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 문제가 더욱 더 커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조차 자유롭게 방문하기 쉽지 않기에 이들의 건강 문제는 악화될 수 있다.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경우도 유사하다. 기후위기가 아닐 때에도 열악한 주거는 그 자체로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박금령·최병호, 2019). 그러나 기후재난 상황에서 열악한 주거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의 문제를 훨씬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기후위기는 [그림 10]처럼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맞물려서 건강, 빈곤, 주거, 젠더폭력 등의 문제를 확대재생산한다. 문제가 더 선명해지면서 분화, 확대, 강화되는 것이다.

[그림 10] 기존의 문제가 기후위기를 거쳐 선명해지고 확대되는 과정



V. 결론

기후위기의 성차별적 영향과 관련한 다수의 해외 사례는 재난 대응 대책이 나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개발국, 성평등지수가 낮은 국가,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조명한다. 기후정의 차원에서 남반구, 저개발 국가의 기후 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연구팀은 ‘한국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는 누구의 기후위기인가, 어떤 기후위기인가를 살펴보려 했다.

연구팀은 기후위기가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후 위기는 삶의 조건과 환경 자체를 바꾼다. 제도적인 제약,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오게 되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이주여성농업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와 농업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폭염, 수해, 한파의 상황에서 휴일 없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해야 했고, 이에 따라 어지럼증, 동상 등의 건강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초과 근무수당은 물론 받지 못했다. 열악한 환경의 기숙사는 덥고 추운 날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돌봄노동과 성폭력 문제 역시 예외 없이 포착됐다.

동자동은 대표적인 서울의 주거밀집지역으로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다. 폭염과 한파, 호우,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지 않는다. 성별 구분 없

는 시설과 만취한 남성들, 폭력의 위험에 직면한 쪽방촌은 여성에게 안전한 시설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고 쪽방촌을 떠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곳은 그들의 네트워크와 생활터전이 있는 곳이고, 제도권 안으로 포착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떠난다고 생활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떠나는 것만이 답이 되겠는가.

이주여성농업노동자와 동자동 쪽방촌 주민 사례는 현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향후 더 심해질 수 있는 기후위기의 성별화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탐색적 연구로서 이번 연구의 의의는 교차성 페미니즘에 입각해 이주여성농업노동자, 동자동 쪽방촌 여성주민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는 점에 있다.

향후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례 조사와 함께 현재 한국에서 기후위기의 성별화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기후위기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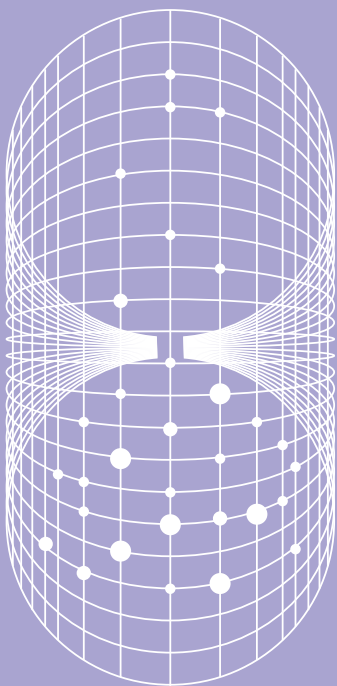
특히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붕괴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존의 성차별적 사회를 재건하는 복구 대책, 물성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속에 성평등을 통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기후위기의 성별화된 영향, 여성이 더 강하게 겪는 피해와 여성만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성평등하게 구성하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는 작업과 함께 가야 한다.

케케묵은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성이면서 노동자이고, 여성이면서 노인이고, 여성이면서 청소년 성소수자이고,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우리들,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사회의 차별과 억압의 선이 우리의 몸을 가로지르고, 그 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후위기와 성차별 문제가 서로 맞물린다.

기후위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평등을 촉진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 성평등을 실현하는 일은 기후위기에 따른 차별적이고 불균등한 피해를 완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취약성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조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만나면서 어떻게 기후부정의를 생산해 내는지,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가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바로잡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자원 분배가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후위기로 생겨나는 문제들은 이전 시기에 축적된 불평등한 구조와 만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부정의를 만들어 내고, 이전의 부정의를 증폭한다. 기후위기로 일어나는 문제는 따로따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차별·불평등 해소는 분리될 수 없다.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체제를 그대로 둔 채 방재시스템을 견고히 한다고 해서 재난이 우리의 삶을 침범하지 않을까. 정의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완전한 기후위기 해결은 형용모순이요, 불가능이다.

기후정의 실현은 차별과 불평등 해소와 함께일 때 가능하다. 기후정의는 필연적으로 젠더정의를 요구한다.



에필로그

시작은 질문이었다. 젠더 관점에서 기후위기 분석과 대응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때면 으레 듣는 말이 있었다. “그래.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대체 한국에서 기후위기가 여성, 성평등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말. 우리 작업은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다.

그 전에 우리의 과거를 조금 꺼내보겠다. 작년 겨울, 늦게까지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좌절한 밤이 있다.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좋은 동료와 연구했는데, 분명 여성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같이 노력도 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젠더 관점의 ‘ㅈ’도 없었다. 핑계야 많지만, 페미니스트로 자칭하는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았다. 연구를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았다. 연구 활동을 하며 나 자신으로 있으려면 무언가 필요했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서 기후위기 분석을 하자고 하바라에게 제안했다. 정은아의 이야기이다.

하바라는 환경운동이나 기후변화 활동을 지속해 온 연구자이다. 하지만 연구자임에 앞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했다. 차별은 대체로 미세한 언어적 차별이나 차별적 관습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런 기본적인 사소한 것들이 쌓여 유리천장이 되고, 결정에서 배제되어 오는 것을 목격했다. 집단 인터뷰나 주민 워크숍을 진행할 때 섭외 과정에서부터 발언과 의견 반영까지 여성 참여자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마주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느끼던 찰나에 정은아를 만나 함께 연구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정은아와 하바라는 기후정의를 요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온 시민사회 연구소에서 일한다. 차별과 부정의에 관한 우리의 감각은 연구소의 유산이기도 하다.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아무도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불러온 책임 그리고 영향은 저마다 다르다. 누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 기후위기는 누구의 위기인가?

연구를 진행하는 사이 기후위기의 영향이 성별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기사, 자료집, 인터뷰가 이전보다 풍부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여성단체에서 기후위기 강의를 열거나 행사 내부에 세션을 만들기도 했다.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성평등과 여성대표성에 관한 행사를 열기도 했다. 반가운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기후위기 아래서 살아야 한다. 모든 정책도 기후위기 대응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성차별을 언제나처럼 무시한다면, 설령 기후위기가 해결된다 해도 성차별한 사회구조, 여성의 위기는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연구가 모든 위기의 해결책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으면 한다. 희망과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믿는다. 기후위기의 차별적인 영향, 특히 성별화된 영향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더 널리 퍼지고, 성평등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우리 작업이 그 출발에 있는 아주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 강준모, 2020, "기후불평등과 사회복지: 동자동 쪽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재단법인 숲과나눔.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한국생활 연구」.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
- 관계부처합동, 2020,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
-
- 국립기상과학원, 2020,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
-
- 김다윤·김경민·김건, 2017, 「주거지 상업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빈곤밀집지역에 끼치는 영향」, 서울연구원.
-
- 김성희, 2018,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
- 김정열, 2021. "진짜 위기는 무엇일까? - 기후재나 시대의 여성농민" 2021 한국여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3-35.
-
- 민주노총, 2020,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
- 박금령·최병호, 2019, "주거취약계층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2), 500-518
-
- 배은경, 2016, "젠더 관점과 여성정책 패러다임: 해방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이론적 검토", 한국여성학 32(1), 2016.3, 1-45
-
- 서울특별시, 2020,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
- 신지영, 2020, "중첩된 재난과 팬데믹 연대 - 한일 장애 활동가 및 간호사 구술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8: 121-164, 역사비평사.
-
- 오성남, 2018, 「기후변화에 의한 극한 기후 및 기상현상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이민지·정건희, 2020,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성별 차이 분석",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5): 329-337, 한국방재학회.
-
- 이유진, 2021, "'생존과 공생' 기후위기가 여성과 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안", 2021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평등/인권분과 강연자료
-
- 이윤영, 2021, "성인지적 코로나19 회복 전략의 국제 현황과 과제: 더 나은 재건을 위하여", 「2021년 젠더리뷰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이정필·박진희, 2010, "젠더 정의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 대응 정책",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18, 한국환경사회학회.
-
- 이주와 인권연구소, 2018,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

이현주·하민정, 2020, “농촌 여성 노인의 재난피해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여름, 27-56.

이현주·엄명용, 2013, “쪽방을 관리하는 여성 독거노인의 쪽방촌 거주 경험과 의미”, 『한국가족복지학』, 39(0): 143-176.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전근배, 2020, “국가의 거리 :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비판사회정책』, 68: 173-207,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정순돌·기지혜, 2008, “강원도 노인의 호우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연구 -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8(1): 57-62. 한국방재학회.

정정훈. 2021. “장애여성운동, 교차하는 억압에 저항하는 횡단의 정치”, 『인권연구』, 4(1): 177-205.

조호제, 2020, 『탄소사회의종말 :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The End of Carbon Society』, 경기:21세기북스.

최예륜, 2020,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에너지 복지 현황 - 빈곤가구 심층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워킹페이퍼』, 2020(5), 사회공공연구원.

하춘·김혜민, 2020,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서울시 쪽방밀집지역 저렴쪽방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8, 『변화하는 기후에서 보건 및 재난 대응을 위한 다학제간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제안』

한국농업경제연구원, 2020, 『코로나19 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20,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Butterbaugh, Laura, 2005, Why Did Hurricane Katrina Hit Women So Hard? Off Our Backs, Vol. 35, No. 9/10, 17-19

D'Ippoliti, D., Michelozzi, P., Marino, C. et al. The impact of heat waves on mortality in 9 European cities: results from the EuroHEAT project. Environ Health 9, 37 (2010). <https://doi.org/10.1186/1476-069X-9-37>

ECBI, 2020, Pocket guide to gender equality

FAO, 2016, Leaving No One Behind: Addressing Climate Change for a World Free of Poverty and Hunger.

Gaard, Greta, 2015, Ecofeminism and Climate Change,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GGCA, 2016, Gender and Climate Change: A Closer Look at Existing Evidence.

IPCC,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

IPCC, 2018, 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

IUCN GPGR, 2020, Gender-based Violence and Environment Linkages : the Violence of inequality.

Ministry of Economy, 2017, Fiji's National Adaptation Plan Framework

Murakami-Ramalho, Elizabeth and Durodoye, Beth A., 2008, "Looking Back to Move Forward: Katrina's Black Women Survivors Speak", *Feminist Formations*, Volume 20, Number 3, 115-137

Neumayer, Eric and Plümpner, Thomas, 2007, The Gendered Nature of Natural Disasters: The Impact of Catastrophic Events on the Gender Gap in Life Expectancy, 1981-2002. *Nature and Society* 97(3):551-566

Parkinson, Debra and Zara, Claire, 2013, The hidden disaster: domestic violence in the aftermath of natural disaster, *Australian Journal of Emergency Management* Volume 28, No. 2

Son, Ji-Young, Lee, Jong-Tae, Aderson, G. Brooke, and L, Michelle, 2012, "The Impact of Heat Waves on Mortality in Seven Major Cities in Korea", *Bell,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120, 4

Taylor, N. and Mouzos, J., 2006. *Community Attitudes to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A Full Technical Report*.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p.79-80.

Thornton, W. E., & Voigt, L. (2007). Disaster rape: Vulnerability of women to sexual assaults during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and Social Policy*, 13(2), 23-49.

UNDRR, 2020, The Human Cost of Disasters – An overview of the last 20 years 2000-2019.

UN Women Watch, 2009, Woemn, Gender Equality and Climate Change. Rosenzweig, C., et al., 2008, "Attributing physical and biological impacts to antropogenic climate change", *Nature*, 453, 353-357.

WEDO, 2020, Spotlight on Gender in NDCS

Terry, Geraldine, 2008, No climate justice without gender justice: an overview of the issues.

Zottarelli, Lisa K., 2008, Post-Hurricane Katrina Employment Recovery: The Interaction of Race and Place

www.psychiatrictimes.com/view/impact-of-covid-19-crisis-on-lgbtq-youth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27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4710

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2147_32524.html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210124655766

www.nongmin.com/news/NEWS/POL/ETC/341865/view

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90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2887

www.seoulant.com/arti/society/society_general/5502.html

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030125770406

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81641056941

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0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611&fbclid=IwAR2vQZ_3HYu0zL-HWAWi9yHPb-gfTDeeHzq93kwClrLOvleDMjb6YYPkLXk

[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2 \(검색일 2021.09.10.\)](http://www.eps.go.kr/eo/EmployPerSystem.eo?tabGb=02 (검색일 2021.09.10.))

www.carbonbrief.org/mapped-how-climate-change-disproportionately-affects-womens-health#

www.carbonbrief.org/in-depth-qa-what-is-climate-justice

www.un.org/womenwatch/feature/climate_change/factsheet.html

www.ohchr.org/EN/Issues/HRAndClimateChange/Pages/PersonsWithDisabilities.aspx

www.downtoearth.org.in/blog/environment/how-climate-change-is-affecting-the-lgbtqia-community-74988

www.cbsnews.com/news/lgbtq-youth-safety-covid-pandemic/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6

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0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311390001319?did=GO

www.peoplepower21.org/Welfare/1742817

부록

자문회의록

자문위원	곽영호
일시	2021. 6. 2. (수) 14:00-15:00
장소	줌(온라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의 젠더 영향을 연구할 때 쟁점과 주의점 ·연구 설계와 분석틀에 대한 피드백 ·재난에서 남성과 여성의 취약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조언 ·중간지원 활동가와 경험 당사자 인터뷰 예비 질문 추천
주요 질문	<p>재난과 건강보건 현황</p> <p>재난과 젠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할까요? 발생한 다면 어떤 건강 보건 문제가 가장 대두될 것 같으신가요? 도시지역의 건강보건 문제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폭염, 장마, 코로나로 재난 상황을 제한했는데, 이 세 가지 재난상황이 불균형/불평등을 조사하고 드러내기 적합할까요? 자연재해와 감염병 피해를 어떻게 구분하여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외에도 젠더 불균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재난 유형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재난 피해자들 현황에서 발견하셨던 젠더 관련 시사점이 있으신가요? 폭염, 장마, 코로나로 인한 건강 및 보건 관점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p>
	<p>연구 방법론</p> <p>최근 재난 현황에서 성별 분리 통계가 부족한데, 어떤 자료를 참고하여 조사대 상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 사례 중 노숙자 집단에서는 남성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데, 저희 연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비교적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과 변수의 설정에 따라 젠더 영향은 없다는 결과 도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례> 로 2013년 대만 태풍 의 창상 감염 사례를 언급하셨는데, 이런 사례들이 젠더 영향을 왜곡하는 사례 로 볼 수 있을까요?</p>

저희 연구는 질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으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 수도 2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분석이나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재난 피해자들 현황에서 발견하셨던 젠더 관련 시사점이 있으신가요?

폭염, 장마, 코로나로 인한 건강 및 보건 관점에서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주요
내용

재난의 정의와 젠더와의 관계

①재난이란 예기치 못한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자연 재해를 고려할 때 ②의학적인 관점에서는 한 지역이나 국가의 준비 상황을 넘어서는 숫자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재난이라고 하며 ③이러한 재난에 노출된 사람들이 겪는 피해는 젠더에 따라 다르며 특히 규모가 큰 재난에서 사망률이 여성에 높고, 기대 여명의 단축이 심각함은 Dr. Neumayer의 연구에 의해 확인된 사실(fact)로 사료된다. 다만 ④이후의 여러 연구에서는 최종 결과(primary outcome)를 설정하는 방법론에 따라 재난에 대한 젠더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사망률 결과와 반대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⑤따라서 재난과 젠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함이 필요하며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젠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에 있어 젠더 관련 시사점은 ①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②사회적/교육 기회의 차별 ③경제적/취업에서의 차별 ④폭력/폭행의 위험 ⑤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불평등성이 부각되기 쉽다.

연구 방향 제시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가장 흔한 것이 호우/폭염/한파/지진으로, 최근 발생한 코로나가 압도적인 감염병 재난 상황으로 인식되므로 호우/폭염/코로나로 재난 선정은 적절하다. 호우/폭염/한파는 앞으로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호우나 폭염은 코로나에 비해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워 젠더 불평등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후재난을 통해 현상의 이유가 젠더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일 수 있도록 ①젠더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②그 피해가 젠더 편향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아주 좋은 경종을 울리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젠더 불균 등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중에 소수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 좋음. 연구의 목적부터 소수자 입장에서 본 재난 피해로 한다면 연구의 특징을 잡을 수 있을 것. 제일 약한 고리의 제일 먼저 무너지는 그룹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연구가 되면 좋겠다.

재난에 있어 젠더 관련 시사점은 ①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②사회적/교육 기회의 차별 ③경제적/취업에서의 차별 ④폭력/폭행의 위협 ⑤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불평등성이 부각되기 쉽다.

재난의 종류	예상되는 피해
폭염	①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적절한 냉방/수분 섭취 부족/무리한 노동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 ②경증으로는 탈수에서 ③중증으로는 기저 질환의 악화와 ④극단적으로는 열사병 등 열과 관련된 질환차별 ④폭력/폭행의 위협 ⑤신체적 취약성 등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의 불평등성이 부각되기 쉽다.
호우	①태풍/폭우로 집이 유실되거나 하면 ②가지고 있던 약이 유실되면 질병 관리가 안되고, ③이재민 수용소에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리고, 위생이 취약하면 설사/배앓이가 잘 생기며 ④범죄에 노출될 위험성
코로나	①장기적인 격리로 심리적 취약성이 발생하여 정신과적 문제와 ②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③만성병 환자의 경우 진료가 지연되고 있으며 ④실제로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도 소생술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⑤경제사정 악화로 실업/고용불안이 증가하여 ⑥취약계층의 경우 비정상적인 경제활동

폭염: 우리나라에서 나온 의학논문에 의하면 8개 도시에서 연구를 했는데 폭염과 한파에서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없다는 연구가 있고(참고문헌 1), 이에 비하여 외국 연구에서는 폭염과 노인 연령의 사망률 연구에서 총 68개 논문을 검토해서 13개 연구가 남녀를 구분해서 결과를 보여준 것이 있어서 비교했더니 결과적으로 8개 연구에서는 나이든 여자가 사망률이 높았다는 결과가 있다.

연구의 방법론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와 설문지를 개발해서

활용하면 객관화된 결과로 제시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식통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건수', '가정 폭력 신고 건수', '가출 청소년 성비' 등 재난 전후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통계와 인터뷰 등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뷰 전후로 중간 지원 활동가들에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자문위원	김현미
일시	2021. 6. 4. (금) 14:00-15:00
장소	광흥창역 카페 리카르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재난의 여성 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쟁점 ·연구 설계와 분석틀에 대한 피드백 ·어려움 가시화가 '피해 경쟁'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중간지원활동가와 경험 당사자 인터뷰 예비 질문 추천
주요 질문	<p>재난과 젠더화된 피해</p> <p>·반 생태주의적 개발과 자본주의 → 기후위기 → 더 빈번하고 심한 재난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것은 자원접근성이 부족하고 회복력이 약한 존재인 여성, 그중에서도 장애여성, 여성청소년, 이주여성처럼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인 여성이 재난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지 드러내려고 합니다. 기후정의와 회복력, 취약성과 교차성을 엮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큰 일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①이들이 더 취약하게 되는 원인 분석 ②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드러내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p> <p>·기후재난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장기적이고, 극단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당사자/관련 단체도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할 말이 많다고 하는 반면 풍호우나 폭염에 대해서는 재산 피해 외에 어떤 것을 더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재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더 들여다보면 좋을까요 (가사돌봄, 고립, 정신건강, 혐오가 심해짐 등등)?</p>

	<p>연구 설계</p> <p>·연구 기간과 금액의 제약 속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보는 대신 취약한 위치에 있지만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소수자 여성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①‘누가 더 취약한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②피해 경쟁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수자라고 여겨지는 특성을 지닌 여성을 전부 나열하면 될까요? 분석이 아니라 백화점식 나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럼에도 예비 연구로서 사례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2030 여성(정신건강과 자살률, 고립과 실업 측면에서)을 다루려고 합니다. 적절한 대상일까요?</p> <p>·저희 연구는 질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으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 수도 1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분석이나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p> <p>·연구 일반화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성단체들에게 협조를 구해 온라인 서베이(100명가량)를 계획했으나 규모가 수천 명이 되지 않으면 대표성 문제가 생긴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서베이를 진행하지 않고 개별 사례의 특성을 더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서베이 없이도 재난 상황에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를 일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p>
<p>주요 내용</p>	<p>연구 방향 제시</p> <p>재난과 젠더화된 피해를 연구하고자 할 때 기존 젠더 문제는 복합 차별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각각의 경험의 특수성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경험을 연구하다 보면 구조적이고 공통적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화된 형태(젠더화) 영향과 함께 볼 것은 복합차별에 의한 조건(계급, 나이, 성소수자성, 장애 등)이다.</p> <p>·저희 연구는 질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으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 수도 1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분석이나 시사점을 끌어내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p>

재난과 젠더의 관계

재난/재앙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①재앙의 불평등한 영향력 ②회복이나 구제에 대한 불평등 ③역량(개인적 역량, 법 제도 등 국가적 역량, 커뮤니티 역량)이다. 특히 회복과 구제 과정에서 주류 패러다임이 반복된다. 국가나 엘리트가 제시하는 방식은 일괄적/획일적일 뿐, 여성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상황에서 여성에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이미 축적된 불평등이 있는 사람들의 재앙은 재앙을 대응하는 역량부터 차이가 나고, 고립되어 있으니 상호연대가 약해져 결과적으로 더 취약해 진다.

능동적 주체로서 여성

개인을 피해자 상황으로 제한하지 말고, 재난/재앙 상황에서 벗어나고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 노력을 했음에도 좌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통해 차별을 분석해야 한다. 여성의 경험은 피해조건이기도 하지만 변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개인적으로 인류학자로서 지역이나 시스템에서 살아온 토착적 지식과 지혜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여성이 그런 지식과 지혜를 보존해 오는 경우를 자주 본다.

기후위기와 재난

이 연구의 재난을 선정할 때, 기후위기가 배경임을 서론에서 충분히 밝혀야 한다. 과거의 재난은 국지적이었지만, 이제는 지역차원의 재난이 아닌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자연재해 연구는 국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가시화 됐다. 연구 사례로 지난 5년간의 열파 피해나 매 우 지역적인 형태로 재앙을 겪은 사람들의 연구는 어떻게 포함을 시킬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은 방역이라는 사회적 체제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비교적 뚜렷이 복합 차별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으로 구분하여 사례 조사하는 것도 좋겠다.

자문위원	고정근
일시	2021. 5. 21. (금) 16:00-17:30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목적	연구전반적인 방향 자문
주요 질문	<p>1.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 방법론과 대상자를 좁혔습니다. 적절한지,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p> <p>2. 설문조사 혹은 인터뷰 시 밑에 삶의 질 평가 지표를 활용해서 재난상황 전후로 여성들이 겪는 경험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적절한가요?</p>
주요 내용	<p>- 탐색적인 연구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한된 3개월이라는 기간에 진행해야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집중해서 인터뷰집 형식으로 내는 것도 가치 있을 것 같다.</p> <p>- 코로나, 기후라고 하는 재난이 활동을 제한하고 여성적 특성 때문에 더 제한이 커서 고립과 단절. 그렇게 주요 키워드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립에서 벗어나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뭐인지 까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다.</p> <p>- 인터뷰 대상자들의 공통된 특성들이 있을 것이다.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상황에서의 고립과 여성으로 갖게 되는, 이중적인 고립이 나타나는, 그 내용은 다를지언정 속성은 비슷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성에 맞게 코로나와 기후를 잘 섞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p> <p>- 지금의 연구계획은 2~3년 연구계획 수준으로 너무 광범위하다.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하고, 나중에 정책 시사점을 내는 거 어렵다고 하면 그때 자문회의를 하든 FGI 해서 민간그룹과 전문가, 행정그룹으로 구성해서 조언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p>

집담회

참석자	<p>히려스행동 활동가, 린스당사자/야학학생회장,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정은아, 하바라</p>
일시	2021. 6. 8 (화) 10:00-12:00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 주다 회의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재난의 여성 소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쟁점 · 연구 설계와 분석틀에 대한 피드백 · 어려움 가시화가 ‘피해 경쟁’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중간지원활동가와 경험 당사자 인터뷰 예비 질문 추천
주요 질문	<p>Q.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p> <p>Q. 이주여성, 린스여성, 장애여성이 일상에서(재난x)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장 큰 문제가 문제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혐오, 차별, 제도 부족, 주거취약성, 사회 인식부족, 경제적 어려움, 정책적 지원 부족, 정보 접근 어려움 등).</p> <p>Q. 코로나19로 주거취약계층/이주여성/장애여성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의료공백,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됨, 시설 폐쇄, 돌봄노동 증가 등)?</p> <p>Q.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문제 상황을 지원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p> <p>Q. 5년 전과 비교해서, 서늘한 여름, 따뜻한 여름, 태풍, 장마 등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나요?</p> <p>Q. 폭염, 홍수, 장마, 폭설과 같은 극한 기후 상황을 체감하시나요? - 체감한다면 어떤 부분이 얼마나 힘든가요?</p>

- 체감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Q. 폭염, 풍호우, 가뭄과 같은 재난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기후재난이 한국에서 주거취약계층, 이주여성, 장애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19와 재난상황에서 청소년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문제

일상

- 법률상 미성년자는 부동산 계약, 세대주 전입신고 어려움.
- 고시텔, 타인의 집, 파트너 이름으로 계약하여 동거, 쉼터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음.
- 시설 입소 과정에서 정체성이 노출되기도 함. 종교시설이 많아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이 아님.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청소년은 여성/남성으로 구분된 시설에 입소해야 함. 혐오발언이나 차별 때문에 시설을 떠나기도 함.
- 탈가정 청소년은 주거 이동이 잦음. 쉼터, 고시원, 원가정, 탈가정을 반복함.
- 입원 시 부모동의 필요, 일상적 건강관리와 의료시설 이용 어려움.
- 사회적 혐오가 심해 정신질환의 위험 노출되어 있음.

코로나19, 재난

보장되지 않는 주거, 안전하지 않은 집

-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무르라'고 하지만 안정되고 인간다운 주거를 영위할 수 환경이 모두에게 갖춰지지 않음.
- 고시텔, 월세방, 타인의 집, 쉼터 등에 주로 머무르므로 폭염시 에어컨 사용, 자가격리, 건강관리와 자기돌봄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원가정에 머무르는 청소년도 양육자와 관계에 따라 집이 편안하거나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 위협적인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커짐 .

	<p>방역, 지원체계 사각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되어 탈가정, 혹은 양육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은 자기 몫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함.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지원이 제공되어 탈가정 청소년은 지원에서 배제됨. <p>경제적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에서 쉽게 해고되고, 월세와 생활비 부담 어려워짐. <p>혐오와 차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 혐오가 심해지면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받음. ·퀴어문화축제, 땃똥포차 등 자긍심을 느끼고 서로 지지해주는 기회와 네트워크가 사라지면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우울함과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활동지원제도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일상 유지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장애인을 무조건 시설로 격리하려고 하고, 선택권을 뺏으면서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와 자주권 박탈이 자주 발생함. ·장애여성은 성적권리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무성적인 존재 혹은 성적욕구를 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양 극단의 이미지로 대상화됨. ·성폭력 피해 또한 무력함이 증명될수록 피해자로 인정받고 지원연결로 이어짐. ·장애인에게는 가족 돌봄이 우선시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 선택지로 시설 입소를 당연시함 (독립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

·의료인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의료기관의 물리적인 조건 자체가 장애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장애여성의 몸은 사회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현장에 진입 자체가 어렵고, 이것은 경제적 빈곤 및 장애여성이 독립 주체로 사회에 자리잡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어짐.

거리두기 어려운 조건

·장애로 인해 신변보호 등 밀접접촉을 할 수 밖에 없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성에게 장애여성과 활동지원사 간에 2m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 없음.

·활동지원으로 인한 밀접접촉으로 감염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그로 인해 외부활동은 점차 제한하게 됨.

방역 지침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 및 탈시설 권리침해

·시설 장애인의 일상은 방역을 이유로 더욱 통제되며, 탈시설 논의는 미뤄짐.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는 출, 퇴근이 허용되는 등 방역 지침이 일관적이지 않음.

의료 및 돌봄 등 공공 서비스 공백

·코로나19 전파 감염에 대한 염려, 부담이 높아 병원 진료 자체를 최대한 미루고 참는 상황이 발생함.

·장애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상황 발생함.

·자녀가 있는 장애여성/여성의 경우 유치원, 학교, 복지관 등 휴관 및 전반적으로 가족들의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돌봄 노동의 양이 대폭 늘어남.

·복지관, 작업장 등의 휴관으로 장애여성 당사자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됨.

	<p>노동의 불안정성</p> <p>·장애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오해로 근무지에서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발생.</p> <hr/> <p>친밀한 폭력 발생 빈도 높아짐</p> <p>·열악한 주거 조건에서 집안에서 지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외부활동 제한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동거 가족 간에 폭력 발생 가능성 높아짐.</p> <p>·거주공간 내에 독립된 공간이 없어 신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음 크가 사라지면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우울함과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음.</p>
<p>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홈리스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p>	
<p>일상</p>	<p>·개인 위생과 시설이 갖춰진 주거 지원이 아닌 일시보호시설(응급잠자리) 우선의 주거지원정책.</p> <p>·쪽방상당소가 있는 쪽방에 거주자가 등록된 여성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월경용품은 물론 월경 중 샤워도 하기 어려움.</p> <p>·‘노숙인진료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p>
<p>코로나19, 재난</p>	<p>강제 퇴거</p> <p>·공공역사, 여성이 많은 버스터미널 등 생활 영역에서 노골적인 강제 퇴거를 당함. 소독, 방역을 핑계로 구청과 경찰이 합작해 생활 집기를 쓸어가 쓰레기차에 버림. 의자를 뽑고 전기와 난방을 끄고 텔레비전 전원을 끄고 물청소를 자주 해서 머무르지 못하게 함. 지하통로도 전부 접근금지가 되어 서 있을 수도 없게 됨.</p> <hr/> <p>지원 체계 중단</p> <p>·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급식지원이 거의 중단됨.</p> <p>·서울시위탁급식소(따스한채움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서울시에서 전자회원</p>

증(사진과 이름 표기)을 도입해 거리노숙인을 제외한 쪽방 주민, 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려고 함. 장애가 있거나 이주민이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여성은 이용이 어려워짐. 문제 제기를 받고 중단했으나 여전히 알음알음하고 있음. 전자회원증 발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은 차라리 안산, 인천, 성남, 의정부 등 멀리까지 이동해서 식사하기를 선택함.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해야만 급식소 이용 가능함.

·세탁기, 샤워실이 있는 쪽방상담소, 센터 이용이 중단되면서 폭염, 월경 중에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려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내 여성응급잠자리(방 두 개)를 자가격리 시설로 바꾸면서 여성들이 바깥에서 배회하거나, 밤에도 위험한 상황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황이 됨.

거리두기 어려운 조건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발발.

·개별 취사시설, 샤워실, 화장실도 마련되지 않은 쪽방 건물을 코호트 격리하면서 아무런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을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경우 있음.

의료 공백

·노숙인의료지원을 하는 국공립병원들이 코로나19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

·입원중인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퇴원하게 됨. 몇 군데 노숙인 진료시설에 연락했으나 신규 입원을 받지 않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있음. 다리가 절단되었는데도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입원을 거부당해 단체 도움을 받아 다른 병원에 입원함.

홈리스를 배제하는 방역 정책

·주민등록 중심의 재난지원금 수령 어려움.

·마스크 부족. 지원하려해도 산재지역에 있는 여성은 특히 찾기 어려움.

·통신수단이 없는 홈리스는 재난 안내를 받거나 관련 정보 접근 어려움.

코로나19와 재난상황에서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

일상

- 지역사회, 공공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주여성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성’낙인 되는 경우 많음.
- 이주여성의 다양한 상황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 정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전국 6개), 쉼터(전국 28개) 부족
- 가부장적 통번역으로 이주여성의 상황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 하는 경우 있음
- 공공기관 이주여성 통번역사 최저임금만을 지급함
- 귀환 이주여성 소극적 자녀 양육 문제 겪음. 한국 남편 연락두절, 양육비 미지급, 자녀 국적 취득에 대한 미동의 등으로 이한 문제 발생

차별과 혐오

- 외국인, 특히 중국인 혐오와 낙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해짐
-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이 심해짐

코로나19, 재난

방역 정책의 사각지대

- 공적 마스크 배부가 건강보험,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이들만 해당됨.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농어업분야 이주노동자, 과체류이주민, 무국적아동 배제됨
-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제외한 소수언어 정보 접근성이 낮았음 (현재는 다누리콜과 연계됨)
- 원격 수업을 위한 기기, 교육 지원이 없어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서 결혼이주 여성과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짐
- 식당 등 서비스직종에 이주여성이 많은데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해고됨
-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유학생도 국경 폐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
- 세탁기, 샤워실이 있는 쪽방상담소, 센터 이용이 중단되면서 폭염, 월경 중에도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어려움.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내 여성응급잠자리(방 두 개)를 자가격리 시설로 바꾸면서 여성들이 비좁아서 배회하거나, 밤에도 위험한 상황에서 잠을 자야하는 상황이 됨.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

·긴급생활지원 등 지자체 지원에서 외국인을 제외함. 문제제기를 받고 나서도 결혼이주여성과 영주권자만 포함시킴

·폭력 피해로 쉼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관에 코로나19검사 예산이 없어 당사자가 알아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입소가가능했으며, 대기 기간 동안 머무를 곳도 자체적으로 구해야 했음

·한국인 남성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쉼터에 입소해 있거나, 이혼,별거 중인 이주여성은 받지 못 함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 이주 여성은 세대주가 되지 못해서 생계비 지원 받지 못 함

·난민 지위 인정받지 못하면 지원 정책에서 배제됨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상태를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워 정신병원에 기약없이 갇히게 됨. 본국에도 돌아가기를 원해도 자가격리와 국경폐쇄로 동행을 구하기도 어려움

·성전환수술을 계획하고 있다가 출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술을 위해 모은 돈을 생계비로 쓰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례

의료 공백

·지정된 이주민 의료 지원 기관(공공의료기관)들이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짐.

대책없는 격리와 거리두기 어려운 조건

·기숙사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외출금지를 당하고 강제로 자가격리 하게 되는 경우 있음. 그러나 기숙사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감염에 취약함.

·국경 폐쇄, 항공료 본인 부담 등의 문제로 과체류자 보호소 밀집이 심해지면서 집단 감염 발발.

·대책 없는 과체류자 일시보호해제는 갈 곳도 없고, 일도 할 수 없이 내던져진 상태를 야기함.

극한 기후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생기는 문제

·폭염, 수해, 한파 등 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을 강제당함.

·주거시설이 취약해 호우 대피소에서 가장 늦게까지 머물러 있었음.

2021 활력향연

활동가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활력향연>은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개발하여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듭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펴냄 | 서울시NPO지원센터

발행 | 2021년 11월 26일

주소 | (04523)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2층

전화 | 02-734-1109

전송 | 02-734-1118

메일 | contact@snpo.kr

홈페이지 | www.snpo.kr

